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세종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실질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3백29만 9천 명으로 그 1년 전보다 36만 7천 명(12.5퍼센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상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쉬었음’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더한 수치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실업을 통계에서 배제한다. 그래서 공식 실업률은 3퍼센트대다. 그러나 실업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실망 실업자’는 대폭 늘고 있다.

실업이 늘어나는 건 고용률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고용률은 60퍼센트에 못 미친다. 지난 10년간 60퍼센트 초반대를 맴돌다 이젠 그마저 무너진 것이다.

단기적으로도 일자리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들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가 다시 2만여 명 늘었다. 지난해 25만 개였던 희망근로 일자리를 올해 10만 개로 줄이면서 지난 연말 15만 명이 일시에 정리됐다. 청년 인턴 6만 6천여 명도 대부분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갔다.

5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 2월엔 실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주는 건 이명박 정부 탓이다. 이명박은 대선에서 일자리 3백만 개를 공약했다.

해마다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을 1조 원 넘게 줄였다.

정부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 정규직을 자르는 정부가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최저임금 일자리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가사·간병 도우미 등은 월 1백 시간 넘게 일하는데 월 평균 임금은



‘2009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이명박 정부는 구직자들이 눈이 높고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해 왔다.

사진 임수현 기자

64만~78만 원에 그친다. 이런 일자리를 15만 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여성 일자리 대책인 유연노동 확산 계획(‘퍼플잡’)과 맞물려 있다.

실적이 나빠도 자르고 좋아도 자르는

이명박이 부자 감세와 대운하 공약은 지키면서 일자리 공약은 내팽개치는 것은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부의 본질을 보여 준다.

올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균형예산론’ 때문이다. 정부 지출을 줄여 정부 예산의 적자를 막자는

균형예산론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최근엔 공기업 ‘선진화’, 교육과 의료의 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악, 퍼플잡 등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도 다시 시작했다.

이명박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 50조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적자 예산을 편성해 정부 구실을 강화하며 기업주·투기꾼들의 이윤을 보전해 줬다. 이제 경제가 외형상 회복세를 보이자 다시 신자유주의 기조를 조금씩 강화하며 노동자·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불안정한 경기 변동과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돈을 벌어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지난해 민간부문 일자리는 30만 개가 넘게 사라졌다.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자는 ‘일자리 나누기’는 그냥 임금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2008년 3분기부터 전체 임금 총액과 실질임금은 계속 줄었다.

노동시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히려 늘어났다. 부분적인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자 설비투자가 조금 늘었지만 기업주들은 새 일자리 대신 기존 노동자들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것으로 대처했다.

경제 위기 와중에도 수조 원대 수익을 남긴 기업들조차 그랬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2조 원 가까이 올린 KT는 연말에 6천 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즉, 회사가 어려울 땐 당연히 줄이고, 좋을 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줄이는 것이 경제 위기 시대의 일자리다. 우선 순위는 늘 기업 이윤이다.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고용 없는 성장”이 이제 “고용 없는 회복”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현상의 실체다.

경제 위기 고통의 뿌리인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해야 한다.

김문성 기자 | enlucha@left21.com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예멘을 추가하려 하는가”



압둘 라자크는 남예멘 출신으로 20년 전 아버지가 셰필드의 철강업에서 일하게 되면서 영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ESOL(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한 영어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남예멘의 독립과 자치권을 옹호하는 영국남예멘위원회의 회

원이기도 하다.

그는 서방의 예멘 개입 역사, 알카에다의 구실과 정부의 부패에 대해 얘기한다. [관련 기사 3, 6면]

“영국은 과거 남아라비아의 일부였던 남예멘(아덴과 일부 보호령)에 1백39년 동안 주둔했습니다. 독립 전쟁은 1967년 승리를 거뒀고 영국은 떠났습니다.

“오늘날 예멘이라 부르는 지역에는 늘 외부 세력이 개입해 왔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하면 개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수십 년간 개입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웃에 강력한 정부나 공화국이 들어서는 것에 두려

움을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북예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예멘 군사령관과 부족장들에게 돈을 지불하곤 했습니다. 예멘을 통제하고 예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67년 항쟁 뒤 남예멘에 공화국이 들어서자 남예멘의 운동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입장에서는 좀더 부족적이고 보수적인 북예멘이 개입하기 더 수월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아파인 후티족 반란군과 예멘 정부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후티족 반란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리전이었지만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예멘 영토에 진입해 후티족 반란군과 싸운 지 70일이 넘었습니다.

대리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예멘에서 국민이 선출하고 시아파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타격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0년 이후 예멘에서 활동을 시작한 알카에다를 제거하라고 부패

한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멘 알카에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연관된 대단히 보수적인 이슬람 교파인 살라피주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조직의 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예멘에 있지 않습니다.

“2009년 알카에다는 예멘 알카에다와 통합해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를 결성했습니다. 알카에다는 예멘 정부에 반대하지 않고 주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멘 정부의 묵인 아래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라피들은 1994년 정부군과 함께 남부 반란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남부 독립 운동을 이단자라고 불렀습니다.

▶ 2면으로 이어짐

세상을 움직이는

“지난 12월 27일 원자력 수출 협정이 체결되던 날, 부르튼 입술 사이로 ‘대한민국 국운이 열리고 있구나’하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다”

이명박, 아직도 입술 타령

“취임 첫날과 마찬가지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임할 것”

이명박, 그건 당시 생각하고

“건설인들의 삽질로 인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올 한해에도 삽질을 계속해야 한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현 등록금을 인하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등록금 인하는] 대학에 파산명령과 비슷하다”

안병만, 교육부 장관인가
사학재단 심부름꾼인가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판단 기준’

“시신을 인질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보상을 요구 ... 이 같은 극단적 행위로 보상금이 더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망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용산참사 타결에 대한
〈동아일보〉의 막말

“이런 사람[용산참사 희생자들]을 ‘민중열사’라고 추어올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그런 폭력적 행동을 계속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조선일보〉

“나라를 위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간첩을 잡은 대공수사관들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다 ... 애국을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한 것을 지금의 잣대로 재어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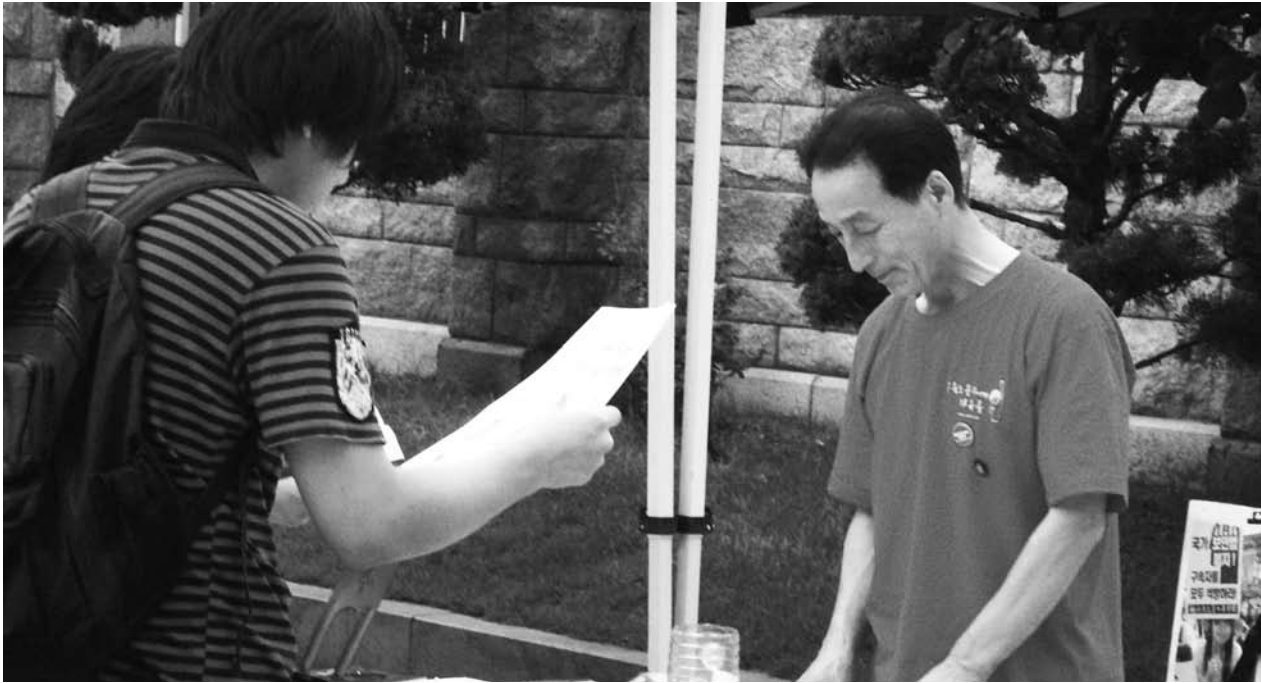
고문기술자 이근안

“인상이 안 좋아 해고가 됐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청소를 얼굴로 하나요? 우리도 바보는 아니라고요!”

해고된 한양대
청소 노동자의 절규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구속노동자 후원과 석방을 위한 홍보전을 하고 있는 강성철 동지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인권 활동가 강성철 동지가 1월 13일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끝내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 정우영은 악질 중의 악질로 이미 노동운동 내에서는 악명을 떨쳐 왔다. 1년 전에 삼성 하청기업인 동우화인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이들 전원에게 어김없이 구속을 결정했다!

판결문이랍시고 검찰의 기소장을 그대로 읽어 내린 용산 참사 재판부처럼, 정우영 역시 검찰측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수용했다.

정우영은 지난해 7월 16일 금속노조의 쌍용차 파업 연대 집회 때, 사복 차림으로 불법 사진 채증을 일삼은 경찰에게 강성철 동지가 항의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판결했다. 증인으로 나왔던 경찰 당사자도 강성철 동지가 자신을 “때리지 않았으며, 말로 강력하게 항의했을 뿐이고 매우 경미했다”고 시인했는데 말이다.

악질

또, 8월 6일 평택경찰서에 쌍용차 노동자들을 면회하러 간 강성철 동지에게 전경과 경찰관이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강성철 동지가 항의한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란다. 경찰들이 강성철 동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2시간 동안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우리측 증인 진술을 재판부는 강그리 무시했다. 심지어 경찰서에 설치된 CCTV 필름을 증거 자

료로 제출하라는 변호인의 요구에, 경찰은 “잃어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

결국 재판부는 “경찰관 증언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강성철 동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시작 전에도 정우영은 방청인들에게 법정 내에서 소란스런 언행을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엄포를 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한 방청인 한 명을 감치 재판하겠다고 끌고 나가 격리시켰다.

강성철 석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는 재판이 끝난 직후 회의를 갖고

항소심 준비, 석방 촉구 기자회견, 석방 탄원서와 서명운동 등 강성철 씨가 석방되는 날까지 여러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기로 했다.

공대위 활동가들은 같은 날 특별면회로 강성철 동지를 만났다. 강성철 동지는 실형은 예상한 것이라며 남은 기간 열심히 싸우겠다고 투지를 밝혔다.

“감옥 안에서 저들에게 대항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며 “[밖에] 나가서도 기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투쟁의 모체를 찾겠다”는 강성철 동지에게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 바란다.

오정숙 강성철 석방 공동대책위원회



2년간 30여 명이 과로사한 현대차 ‘귀족(?)’ 노동자들

지난 연말 현대차의 임금 협상이 타결된 이후 보수 언론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이 올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며 사내유보금을 10조 이상 쌓아 둔 상황에서, 임금 동결을 합의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흡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대차의 ‘무정’의 임금 동결’ 합의가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동결을 강요할 명분이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의 “(현대차 노조가) 성과급의 일부를 출연해 스스로 성의를 보이는 것이 대기업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현대차 노조가 져야 할 책임은 ‘성과급 사회 환원’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



이렇게 주야 맞교대로 일한다

고 그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노동 귀족’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하는 듯한데, 이것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노동자들 대부분은 주야 근무로 생체리듬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낮은 기본급과 시급제로 인한 생계비 부족분을 메우려고 몸을 축내며 잔업·특근에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말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심장마비나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33명이나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십 수 명에 이른다.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노동자 4명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고, 이후에

도 뇌출혈, 백혈병 등으로 여럿이 죽어갔다. 자력과 주차장 등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된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도장(페인트) 공장에서 일하다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한 노동자도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앞날이 창창한 40대 중후반 나이였고, 90퍼센트 이상이 주·야 2교대로 일하던 생산직 노동자들이다.

골병

우리의 고된 삶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결과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퇴근해서 5~6시간 눈을 붙이고 나면 저녁 8시에 바로 출근을 해야 한다. 주말 특근을 끝낸 동료들을 보면,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은 병든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서 기운이 하나

▶1면에서 이어짐

“남예멘 사람들은 독립을 원합니다. 1990년 남예멘과 북예멘이 평화적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러나 일 년 뒤 북예멘은 남예멘의 혁명적 운동의 지도자를 공격했습니다. 1994년 북예멘은 피의 내전을 통해 남예멘을 강제로 접수했고, 민주 정부를 무너뜨리고 남예멘 장교들을 군에서 제거했습니다.

“수만 명이 남예멘에서 떠났고, 이웃 나라로 망명하거나 난민이 됐습니다.

“오늘날 독립을 요구하는 영향력 있는 운동이 존재합니다. 남예멘인들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화적 혁명을 원합니다. 통일은 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 사회는 남예멘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석방

“미국은 예멘 정부에게 알카에다를 추적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멘 정부는 여전히 알카에다를 상대할 때 외교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둘 사이에 협상이 있었고 많은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예멘 감옥에서 석방됐습니다.

“예멘 정부와 접촉해 온 일부 알카에다 지도자들은 지금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됐습니다. 예멘 정부는 서방 진영의 지원을 바랍니다. 정부는 서방에서 받은 무기를 이용해 남부의 운동을 공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손잡고 후티족 반란군과 싸우려 합니다.

“알카에다와의 전쟁은 예멘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알카에다는 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폭력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살해하면 알카에다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예멘 정부는 알카에다를 제거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현 예멘 정부는 31년간 권좌를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부패해 대중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민간인 집단을 상대로 내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알카에다에 대해 예멘 정부가 미국에 주는 정보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미국의 개입 전술은 대단히 위험하며 알카에다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2주 전 예멘 정부는 알카에다 전사 세명을 죽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 52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개입의 희생자는 여성과 아이 들이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까?

출처 영국인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기자

정동석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오바마 취임 1년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난해 이맘때, 전 세계에는 희망과 낙관이 가득했다. 오바마는 지긋지긋했던 조지 부시 집권 8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국,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할 듯 보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대는 혼란과 실망으로 바뀌었고, 집권 초기 70퍼센트를 웃돌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40퍼센트대로 급락했다.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구출하기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가 공화당 후보 매케인을 상대로 압승한 데는 경제 위기에 힘입은 바가 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실물 경제로 빠르게 확산하며 부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부추겼다. 오바마도 부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맹렬히 비판하고 매케인이 당선되면 ‘부시 3기’가 될 것이라 공격했다.

오바마가 당선하자 많은 언론은 그가 ‘제2의 루스벨트’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에서 국민을 구출해 낸다는 ‘진보적’ 대통령 말이다. 그러나 당선 직후 오바마의 경제팀 구성을 지켜본 미국의 진보 인사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인 클린턴 정부 시절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며 ‘클린턴 3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부시 3기’에 살고 있다며 한숨을 쉰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오바마는 경제 위기의 주범인 월가(街)에 천문학적인 돈을 안기며 파산을 면하게 해 줬다. 그러나 오바마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월가에 대한 규제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그들은 1년 만에 ‘위기는 끝났다’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GM 등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노동자들에게 하고, 임금 삭감, 노동조건 후퇴 등을 강요했다.

그래서 2009년 전체 기업 순익에서 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1.5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주택이 가압류돼 집을 잃은 미국인은 현재 약 3백50만 명에 이른다. 2009년 3사분기 기업 생산성은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노동비용은 오히려 5.2퍼센트 감소했다. 공식 실업률은 26년 만에 10퍼센트를 돌파했다(실질 실업률은 약 20퍼센트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시 3기’가 경제 부문에 그치지 않은 데 있다.

부시의 전쟁을 오바마의 전쟁으로 만들기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은 것은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오바마의 대선 캠페인 슬로건은 어디에?)

날카롭게 비판하며 ‘반전 후보’ 이미지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이라크 전쟁에 “절대 반대”하는 유권자의 87퍼센트가 오바마를 지지한 반면, 이라크 전쟁을 “전폭 지지”하는 유권자의 96퍼센트는 매케인을 지지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현실은 기대와 사뭇 달랐다. 오바마는 취임 직후 2만여 명을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했고 얼마 전 3만 명 추가 증파를 선언했다. 심지어 ‘아프파 전쟁’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파키스탄으로 전쟁을 확대했다. 덕분에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접경 지역에는 3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생겨났다. 2009년 한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미군은 약 3백 명으로 개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죽고 다친 민간인 수는 집계 불가능할 정도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적어도 2011년까지 미군은 최소 5만 명이 계속 주둔할 것이다. 그 뒤에도 미군은 블랙워터 같은 사실 경호업체 용병들과 함께 이라크 곳곳에 건설된 미군 기지를 지킬 것이다.

최근 성탄절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 뒤 오바마가 예멘 알카에다를 상대로 내뱉은 험악한 말들을 듣고 있으면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와 네오콘들이 연상될 정도다.

물론 대외정책에서 오바마가 부시와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취임 초 오바마는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이슬람 세계에 화해를 청하는 연설을 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 정책을 비

판했다. ‘핵 없는 세상’을 말하며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기지 건설을 철회하고 러시아와 핵 감축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말’은 금세 ‘행동’과 모순을 빚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정착촌 확대를 강행하는데도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고, 이란에게도 다시 회초리를 들고 압박을 강화했다.

오늘날 미국의 취약한 처지 때문에 러시아의 동유럽 MD 철회 요구를 수용하긴 했지만 대신 지중해에 해상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려 하고, 핵감축 협상도 강대국 중심의 핵독점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는 성격이 강하다.

요컨대, 대외정책에서 오바마의 첫 1년은 전임자 부시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이런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 준 노벨위원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광분에 굴복한 의료보험 개혁

그나마 오바마가 2009년 최대 처적으로 내세우는 의료보험 개혁을 보자.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국가로 현재 약 4천6백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번 개혁으로 그중 약 3천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백 년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라고 추켜세웠다.

사실 대선 후보 시절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에서 핵심은 ‘공공보험’을 도입해 민영 보험사들과 경쟁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보험업계 등과 타협하느라 오바마는 결국 공공보험을 포기하고 되레 보험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새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3천만 명은 돈이 없어도 ‘강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미납시 벌금을 내야 한다. 보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할 것이다. <LA 타임스>는 이번 의료 개혁이 민영 보험사들에게 엄청난 “노다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미 보험업·의료서비스업·제약업 관련 주가는 오를 만큼 올랐다.

이 밖에도 정보 기관이 영장 없이 불법 도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금을 늘려 가고, 동성애자 차별 조치를 옹호하고, 노동자자유선택법[노조 설립을 손쉽게 만드는 법] 도입을 미루는 등 오바마는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을 거듭 실망시켰다.

오바마는 왜 굴복하고 있는가?

2008년 초, 그해 말 대선에서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미국 주류 정치에서 보기 힘들었던, 아래로부터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선거 캠페인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시 집권 8년 동안 변화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줬고, 오바마는 순식간에 기존 정치판을 갈아엎을 ‘개혁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연설과 선거 캠페인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의 실제 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라크 전쟁 쟁점을 제외하고 오바마의 정책은 힐

러리 클린턴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기업주들은 안심하고 오바마를 지지할 수 있었다. 이 점이 오바마가 이른바 민주당 ‘좌파’인 테니스 쿠시니치와 달리 민주당 경선을 완주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오바마는 기업 권력이 지배하는 기존 정치권에 도전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에서 기업주들과 얹히고설긴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개혁을 위해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루스벨트 정부 아래서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루스벨트가 특별히 진보적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었다. 애초 루스벨트가 제안한 ‘뉴딜 정책’은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친 것이었다. 여기에 개혁적 조치가 담긴 것은 당시 미국을 뒤흔든 아래로부터 강력한 대중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오바마를 통해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의와 혼란에 빠져 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사람들이 1930년대와 같은 대규모 투쟁에 나서는 것에 달려 있다.

새로 나왔습니다!!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4호 (2009년 겨울호)

특집: 최근의 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_ 조셉 추나라

이윤율과 오늘날의 세계 _ 크리스 하먼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_ 김하영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_ 정병호

쌍용차 대안과 공기업화 논쟁 _ 정종남

경제 위기 시기 복지국가 전략의 의미와 한계 _ 장호중

다윈과 진화론 _ 알렉스 캘리니코스

현대 진보사상 조류

트로츠키 전기 작가

아이작 도이처 _ 닐 데이비슨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역사에서 배우기

서방 공산당의 궤적 _ 크리스 뎀버리

구독 신청 문의

가격 15,000원

Tel 02-2271-2395 / Fax 02-2271-2396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 낙관했다.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적대적 방치’ 정책을 깨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집권 초 경제 위기와 중동과 서아시아 전선에 대처하는 데 주력한 오바마는 대북 정책에서 사실상 부시의 정책 기초를 유지하며 시간을 끌었

다.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요구했고, 경제 제재를 풀지 않았으며,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결국 참다 못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그래도 상황 변화가 없자 2차 핵실험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중동과 서아시아 전선에 발이 묶인 미국은 기껏해야 기존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북한을 방패막이로 삼고 싶어 하는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경제 제제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런 불안정이 더한층 심각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점차 협상 분위기로 나아갔고 최근 특사 보즈워스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시급 오바마 정부에 기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순탄히 이어질 것이라 장담하긴 어렵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영향

력을 유지하려면 북한을 계속 ‘악마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즈워스 방북 직후, 미국 정부에게서 정보를 얻은 타이 정부가 북한발 무기 선적 의심 화물 여객기를 수색한 사건은 의미심장하다.

요컨대, 중동과 서아시아 전선의 위기 때문에 북한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 제국주의의 수장 오바마가 이런 구조를 깨고 파격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기란 앞으로 도 쉽지 않을 듯하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김광렬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8일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된 8월만 해도 교과부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서울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 내 관련 부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기습적으로 원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일본처럼 국립대의 일괄 법인화를 추진해 왔으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법인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끈질기게 국립대 법인화를 유도해 왔으나 대학구성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일보 후퇴해 대학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개별 법인화로 선회하면서 울산과학기술대를 법인대학으로 설립하고 법인화를 유도해 왔다.

그럼에도 성과가 없자 급기야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법인화를 앞세우는 한편 지난해 9월에는 특별 재정지원을 미끼로 하고 대학구조개혁을 빌미 삼아 대학간 통폐합을 법인화에 연계 하는 졸속정책까지 내놓은 바가 있다.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 처리했다. 결국 국립대 법인화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국립대학들을 압박하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를 보면, 법인대학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 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게 했다.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인,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각 1인 등 당연직 이사 5인을 포함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과부장관 승인을 받은 이사 등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오랫동안 투쟁해 쟁취한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는 당연히 폐지되며, 총장은 이사회가 선임해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총장은 이사장을 겸직해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현재보다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가 되면서 서울대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돼,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

사진 이미지 기자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배구조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이사회 이사 중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당연직 이사 외에 학내 인사가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명도 없거나(이사 수 7인일 경우) 최대 4명(이사 수 15명인 경우)으로 이사회에 대학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국립대학은 이미 헌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국가기관성과 법적주체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 사회의 역할과 구성에서 나타났듯이 대학의 의사 결정구조에서 오히려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법인화 주목적 중 하나는 한정적인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것이다. 결국 대학 운영을 시장경제 논리로 판단하고 평가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축소시키고 국립대학을 공기업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교육·연구 역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서울대 통계연보에서 나타난 4년 만의 서울대 교수들의 평균 논문실적 하락 이유가 경기침체에 따른 연구비 지원 감소라는 데서도 예상할 수 있다. 아시아 명문대학들의 순위가 급등하는 이유가 해당 국가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라는 싱가포르 국립대 탄 초추안 총

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국립대의 설립 목적과 구실에 대한 논의나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 없이 서울대가 법인화의 기폭제 구실을 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합리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거래 의혹이 가득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 거래 의혹

며칠 전 부산대가 2012년 3월을 목표로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로서는 예상했던 국립대들의 법인화 도미노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조차 지방 국립대학들의 연쇄적인 법인화 러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법인화를 한다고 해도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현재 서울대와 여타 국립대와의 행정·재정적 지원 차별화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격차는 오히려 훨씬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의 보유 자산에서 극심한 차이가 나는데다 서울대가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교육·연구를 위한 인프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분을 대부분 학생 등

목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마저 정부가 분명히 통제할 것이므로 지방 국립대학의 몰락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 국립대학의 비율은 사립대학의 20퍼센트도 안 될 정도로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의 수많은 통제를 받아 온 우리 나라 국립대학들의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비에 재정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기성회립대학’으로 운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기회에 서울대 구성원들은 자율보다는 타율에 의한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진정한 서울대가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치적인 논리나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립대학을 통한 고등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고 국립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정한 길이 과연 법인화밖에 없는지 깊게 성찰해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 교육만큼은 정치적 논리나 몇몇 영향력 있는 정부 고관대작들의 업적 쌓기에서 벗어나 백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계획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길 소망한다.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이명박이 요란하게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기업 특혜 도시’였다.

총리 정운찬은 11일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평당(3.3제곱미터) 2백27만 원에 구입한 토지를 대기업들에게 40만 원에 내주고도 법인세를 3년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기업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면제다. 이명박 모교 고려대엔 단돈 36만 원(평당)에 부지를 준다.

인구 50만 명이 목표인 도시에 자율형 사립고·공립고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외국인학교가 모두 생긴다. 영리병원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외국계 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재벌들에게 헐값에 넘[겨] …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세종시를 상납한 게 아닌가” 하며 “‘명박시’라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기업 퍼주기로 귀결된 세종시 수정안

사진 출처 KES 중앙일보

이명박의 세종시 수정안은 노골적인 ‘기업(재벌) 특혜 도시’ 건설 계획으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삭제하는 대신 유치 기업들에게 ‘기업도시’ 수준의 특혜를 주고 운영은 경제자유구역처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은 2조 5백억 원 투자 계획을 발

표하면서 세금과 땅값 등 특혜가 투자 조건이라고 솔직히 밝혔다. 그러나 그뿐이겠는가. 이권회 특별 사면이 결정적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특혜 때문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던 대구·경북이나 혁신도시를 추진하던 지역들에선 ‘세종시 블랙홀’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가 기업에 특혜를 많이 주면 자기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의 ‘헬스케어’ 사업이 입주를 결정하면서 의료 산업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보고 유치 경쟁을 하던 지자체들은 더 긴장하고 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이런 불만을 달래려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지원과 특혜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 되면 기업 특혜 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명박시’

실제로 정운찬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땅값과 세제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 주고 국민 세금으로 사들인 땅을 헐값에 내주는 일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2005년 전경련이 제출한 법안을 노무현 정부가 수용해 시작된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기업과 연계해 육성하는 지역 거점 도시, 국토 균형개발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 웬만한 주요 도시는 모두 혁신도시로 선정됐다.

다. 해당 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준다.

이명박의 세종시 수정안은 이런 신자유주의 천국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2월 국회에서 통과를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원안이 평범한 노동계급에 이로운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한편, 지금 세종시를 둘러싼 이명박과 박근혜의 아귀다툼은 한나라당의 분열을 심화하며 정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통과가 실패하면 이명박의 정치적 권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들의 분열을 경제 위기 교통전가 반대 투쟁을 건설하는 데 이용할 필요가 있다.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①

엄청난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중국의 고성장

본지의 **김용욱** 기자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선전과 광둥에서 중국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만났다. 2회에 걸쳐 현지 취재 기사를 실는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 위기와 중국 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투쟁에 대한 중국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중국은 2009년 국제적으로 최대 화두 중의 하나였다. 'G2'라는 말은 더는 소수의 미래학 학자들이 사용하는 낱선 말이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 널리 쓰는 시사용어가 됐다. 이처럼 미국발 경제 위기 뒤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압축 성장'에 따른 내부의 엄청난 불균등과 모순은 여전하다.

예컨대, 나는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의 주요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볼 수 있었다. 한 평에 한화로 무려 3천만 원이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한 국영 개발 회사의 사장은 지불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인근에 연간 임대료만 1억 위안(약 1백70억원)에 이르는 초호화 주택이 등장했다. 이 주택은 아프리카 가봉에서 수입한 흙목으로 계단을 만들었고 집안에서 이동할 때 쓰려고 소형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다.

이것은 2주 전 수백 명이 탄광 사고로 죽고, 수출공업단지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이농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투쟁이 계속되는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경제 위기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경제 위기라고? 그렇다. 성장률은 8퍼센트를 넘었는지 몰라도 2009년 상반기까지 일자리가 4천1백만 개나 사라졌다. 이것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추산한 2008년 말 경제 위기 후 발생한 전 세계 해고자 수(약 9천만 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솔직히 주변에서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은 못 봤다. 중국이 '고도 성장기' 한국과 비슷한 — 어떤 면에서는 능가하는 —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은 단편적으로라도 한두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바꾸기를 바라는 저항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 인사조차 매년 10만 건이 넘는 '집단행동'이 발생한다고 인정했다.(정부 공식 집계 발표는 2005년에 8만 6천 건을 넘은 뒤 중단됐다!)

나는 운 좋게도 최근 중국 최대의 공업 도시 중 하나인 선전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남부에서 중국 노동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 경제 위기 뒤 중국 노동자 투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계급 분열의 심화

'차이나 레이버 볼리턴'(中國勞工通訊)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중국 노동자 지원 단체다. 이 단체의 대표 한동팡은 헨안먼 항쟁 당시 철도 노동자였고 베이징에서 독립 노조 결성 운동을 주도했다. 1993년 중국 정부에 의해 추방된 뒤 홍콩에 건너와 이 단체를 만들었다. 현재 이 단체의 영어판 웹사이트 책임자인 제프리 크로살은 2009년 중국 노동자 운동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2009년은 중국 노동자와 중국 시민들이 좀더 적극적, 심지어는 극단적 — 7월 통화철강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막으려고 경영자를 살해했습니다 — 수단을 사용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시작



(위) 2009년 7월 해고에 반대해 3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간 통화철강

(아래) 시련에 처한 농민공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농민공들이 모여 있는 모습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2009년 초에 발행한 보고서 — 《중국의 노동자 운동 2007~2008》 — 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회의 계급적 분단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를 명백히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심지어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에서도 '등록금을 낼 수 없어 기숙사에서 목을 맨 가난한 대학생',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자기 몸에 불을 지른 농민공', '가난한 사람을 차로 깔아 죽인 부자의 죄를 덮어 준 지방 관료' 같은 얘기를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단히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경제 위기를 틈타 기업가들과 손을 잡고 얼마 전 통과된 노동법의 진보적 조항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광둥과 선전 등 대표적 수출공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노동권 옹호 단체들의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이들 단체의 활동가들을 탄압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중국 국영노조, 이하 총공회)은 이런 탄압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정부조차 이런 움직임을 염려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대표적 '집단행동' 77건을 분석한 뒤, 인터넷과 휴대전화 시위를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무력화될 것이 아니라 존중돼야 하며 오히려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공회가 정부와 기업 소유주의 꼭두각시 노릇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노동자 조직의 필요

홍콩에 근거지를 둔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니터'는 1999년 '시에를 전투' 뒤 탄생한 수많은 대안세계화 운동 단체 중 하나다. 이 단체는 최근 중국의 노동자 운동과 환경 파괴 반대 운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지도자인 유아우룽은 《뉴레프트 리뷰》를 포함해 많은 진보 잡지에 중국 노동자 운동에 대해 기고해 왔다.

유아우룽은 '차이나 레이버 볼리턴'과는 달리 중국 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중국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에 조직적인 대규모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계급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가 상황을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는 은행과 외자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었고, 엄청난 경기부양 정책을 펼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의 충격 강도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농민공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 초 정부와 언론은 그 파장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계급 간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체불 임금과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운 좋게도, 30여년 간의 개방 뒤에도 농민공 다수는 고향에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고된 농민공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 주고 고향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엄청난 사회적 긴장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 것이죠.

"다른 한편, 주관적 요인도 봐야 합니다. 1990년 이전 한국 정부는 오늘날 중국 정부처럼 대단히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든 독립 단체들의 씨를 말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가톨릭 단체가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을 펼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1949년 중국 혁명은 농민에게 토지를 안겨 줬고 도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했지만, 동시에 모든 독립적 조직을 배제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는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었던 헨안먼 항쟁은 패배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사회의 엄청난 모순이 경제 위기로 더 심화하고 있고 그에 맞선 산발적인 저항들이 대단히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을 서로 연결시킬 조직적 역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적 대안이 총공회 강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총공련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면서 이에 부응하려고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외국인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려는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진지하게 추진한 지역의 총공회 활동가들은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총공회가 오랫동안 국가 고위 관료와 기업가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국가와 기업에서 독립된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국가는 1997년 경제 위기로 갑작스레 몰락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부보다는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온갖 통계 조작 역사를 볼 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사, 경제 위기로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 기구 붕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독립적 노동자 조직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중국의 활동가들이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지구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기가 독립적 노동자 조직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의 최근 표적, 예멘

시안 러덕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

예멘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최근에 표적이 된 “깡패국가”다. 예멘은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가 득시글거리고 부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실패한 국가”이자 극단주의의 온상이라는 말들이 넘쳐 난다.

12월 마지막 주 오바마 정부는 예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즉 군사 원조를 갑절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 예산 문서는 예멘 군사 원조 증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사 원조는 예멘의 안보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 부대와 해안 경비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고 … 미국의 대(對)테러 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고든 브라운은 1월 28일 런던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논의할 국제 회의와 함께 예멘 문제도 다룰 국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예멘이 전쟁과 불안정으로 황폐해진 나라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제국주의가 수십 년간 이 지역에 개입한 결과다. 따라서 서방의 개입 강화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미군은 이미 예멘 “보안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리고 12월 17일 예멘 민간인을 1백60명이나 죽인 크루즈 미사일 2기를 미국이 발사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이 공격이 있고 나서, 예멘에서 알카에다와 함께 훈련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미국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서구 열강의 압력을 받은 예멘 정부는 1월 4일, 미국·영국·프랑스 대사관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알 카에다 대원 2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예멘 정부는 엄청나게 부패했고 끔찍한 인권 침해 경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알리 압둘라 살레 정권에 돈을

대 주며 후원하고 있다. 살레는 31년 동안 권좌를 유지하며 가족을 요직에 앉히고 경쟁자들을 매수했다.

예멘은 이미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교육 수준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하며, 실업은 선거권이 없는 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예멘 인구의 절반쯤이 15세 이하인데 선거권은 18세 이상부터 가진다.]

이 나라의 역사는 파괴적인 내전으로 얼룩져 있다. 미국의 개입은 폭력과 참상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은 예멘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만이 아니다. 예멘의 이웃 나라들도 “경비전”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실행할 자금도 받았다.

치솟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은 석유를 위해,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4천9백만 달러가 약간 넘는 돈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썼지만

2010년에는 거의 갑절이나 되는 돈이 책정됐다. 그 밖에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마다 막대한 금액의 무기를 거래한다.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스런 조짐이 있다.

2010년도 미 의회 외교 예산 심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테러리스트들이 그 지역에서 새롭고 더 손쉬운 공격 대상을 찾고 있고 오만의 이웃 나라인 예멘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이 계속 테러 없는 나라로 남아 있으려면 국경을 순찰하고 잠입자 차단을 지원할 미국의 대테러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세계는 훨씬 더 위험해지고 불안정해졌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미국 주도의 전쟁은 이제 파키스탄·예멘·소말리아와 그 밖의 나라들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시리아·이란·레바논 같은 나라들은 “테러 지원국” 목록에 올랐다.

“테러와의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 되면서, 미국의 일부 권력자들조차 이 전쟁의 쓰디쓴 열매를 삼키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전 예멘 주재 미 대사 바버라 보딘은



예멘 헬리콥터가 알카에다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지역 위를 날고 있다.

최근 <토론토 스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나서서 이 전쟁을 우리의 전쟁으로 만든다면 … 이 전쟁은 갑자기

우리에게 대항하는 전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번역 김세원

분쟁을 악화시키는 CIA와 무인 폭격기 공격

란이 많은 부분이다.

공식 통계를 보면, 2008년 8월 이후 무인 폭격기 공격 70회로 6백65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무인 폭격기는 보통 이른바 ‘탈레반 전사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마을을 겨냥해 사용됐는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다.

무인 폭격기를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

는 민간인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기 더 쉬워졌다. 탈레반이 먼저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서도 알카에다 용의자들과 그들의 훈련소를 공격하려고 무인 폭격기를 사용했다.

이런 공격을 뒤에서 조종한 것은 주로 미국의 비밀 정보기관인 CIA였다. 오바마는 파키스탄에서 CIA가 운용하는 무인 폭격기 공격을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

최근 파키스탄에 인접한 아프가니스

탄 CIA 기지에 대한 공격은 CIA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 폭로했다.

정보원을 고용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살폭탄 공격으로 CIA 근무자 일곱명과 요르단인 한 명을 죽인 그 사람은 원래 CIA가 정보원으로 고용하려고 기지로 데려왔다.

번역 김용욱 기자

다시 거리로 나선 이란 반정부 운동

새로운 반정부 시위가 정부 측과 운동 진영 양쪽을 모두 긴장시키고 있다. **니마 솔탄자데**가 이란 현지에서 상황을 전한다.

지난해 6월 이란 대선 뒤에 등장한 반정부 운동은 공식 기념 행사를 이용해 대중 시위를 벌이며 정부 탄압에 저항해 왔다.

최근 시위는 ‘학생의 날’인 지난해 12월 7일에 시작했다. 이날은 1953년 쿠데타에 항의하다 목숨을 잃은 학생 3인을 추모하는 날이다.[이 쿠데타로 샤(이란 국왕)의 독재 왕정이 수립됐다.]

테헤란, 케르만, 마슈하드 등지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추모 집회가 반정부 시위로 발전했다. 시위대는 보안군과 충돌했고, 친(親)정부 성향의 바시지 민병대 소속 학생들과도 싸움을 벌였다.

학생 소요가 이란 전역의 17개 대학교로 확산하던 중 12월 19일에 시아파 최고위 성직자 후세인 알리 몬타제리가 사망하자 항의 운동은 더욱 확대됐다.

몬타제리는 이란 대통령 마무드 아바디네자드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판해 반정부 운동의 지도적 인물이 된 사람이었다.

쿰에서 치러진 장례식이 대중 집회로 바뀌자 조문객과 보안군 사이에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몬타제리가 사망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항의 시위가 더 큰 규모로 분출했다. 이날은 타슈아와 아슈라[시아파 최대의 종교 행사] 기간(12월 26~27일)이었다.

아슈라는 시아파 제3대 이맘[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인 후세인의 순교를 기리는 날이다. 7세기에 후세인은 자신을 따르는 소규모 무리를 이끌고 억압적인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인구의 대다수가 시아파인 이란에서는 불의에 맞선 전투를 상징하는 아슈라를 흔히들 폭정에 대해 결집하는 때로 여긴다.

아슈라 직전에 반정부 운동은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보수파 성직자들은 종교 행사를 “악용”하는 자들을 진압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슈아와 아슈라 행사에 참가했다.

테헤란, 타브리즈, 아르다빌, 마하바드, 쿰, 시라즈, 아스파한, 나자프 압바드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노인들도 청년들과 함께했다.

정부는 바시지 민병대와 사복 차림의 보안군을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섰다.

5백 명 이상이 체포됐고 9명이 살해됐는데, 사망자 중에는 개혁파 지도자 미르

후세인 무사비의 조카도 있다.

정부는 탄압을 강화해 많은 활동가와 기자들을 체포했다.

또, 정부는 관제 데모도 열었다. 테헤란에서는 친정부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이 시위대의 규모는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수십만 명보다는 훨씬 작았다.

그렇지만 1979년에 대중 운동으로 타도된 역겨운 샤 정권과 달리 지금의 이슬람공화국은 여전히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이 기반은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보수파 진영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 대통령 아바디네자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의 동맹은 강화하고 있지만, 그들은 고립되고 있기도 하다.

발포 명령 거부

보수파 진영이 여전히 군대를 통제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해[지난해 12월 말]에 일부 군부대가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것을 보며 우려해야 했다.

반정부 진영 내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항의 시위들의 특징은 운동 내부에서 급진적 성향이 발전했다는 점이다.



승리를 다짐하는 이란 반정부 시위 참가 여성

6개월 전과 달리 지금의 구호들은 선거 문제에만 국한해 있지 않다. 많은 구호가 하메네이의 권위를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부 시위대가 바시지 민병대와 보안군에 반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쌓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경찰과 바시지 민병대 건물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미 무사비 주변의 반정부 운동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보수파와 타협하길 원한다.

지금 운동이 직면한 핵심 문제는 운동

이 작업장으로 확산해 거리 시위가 대중 파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79년 혁명 때 그랬고, 지난해 여름에도 잠깐 보였듯이 말이다.

항의 운동이 잔혹한 국가 탄압을 물리치려면, 노동자 운동과 결합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이종길

코펜하겐 기후정의 시위 참가기

“전 세계 시민의 직접행동이 지구를 구할 것”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편집자] 2009년 12월 12일 UN 기후회의가 열린 코펜하겐에서는 기후변화를 멈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거대한 시위가 벌어졌다. 무려 10만여 명이 참가한 이 시위에 한국의 기후정의 활동가들도 참가했다. 현지에서 회의 결과를 지켜보며 시위에도 참가한 녹색연합 이유진 에너지 기후변화팀장이 코펜하겐 회의를 평가하고 이후 기후변화 대응 전망을 살펴보는 글을 <레프트21>에 보내 왔다. 지면 관계상 축약해 실는다.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2주 동안 덴마크에서 뭘 하고 왔니? 어떻게 성과가 있던 거야?” 이번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공식등록자 4만 7천 명은 이 대목에서 할 말이 없다. 회의에서 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UN 틀 안에서 논의되는 기후변화협약 체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 회의라는 공간을 대의를 의논하지만 여전히 국적이 최우선이다. 각국 정상들은 자국 국민과 특히 산업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갖는 인식과 합의 수준만큼을 회의장에서 발표할 뿐이다. 이번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실을 기대했지만(심지어 NGO들도), 그 역시 미국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더 정확하게는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받는 의회에 발목 잡혀 있다.

그렇다면 지구를 위한 선택은 무엇이 돼야 할까? 바로 새로운 의정서의 탄생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2퍼센트 감축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의정서가 나와야 하고, 그 속에서 당연히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더 많은 감축 목표를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적어도 1990년 대비 40퍼센트는 줄여야 한다.

9일, 코펜하겐에 도착했을 때 회의는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 8일 덴마크, 미국, 영국 정부가 선진국끼리 논의해 작성한 의장 합의서 초안이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소위 덴마크 문서라고 불리는 이 합의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0퍼센트 줄이도록 돼 있다. 개도국도 선진국과 동일하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1인당 배출량의 한도에 있어서 현 추세를 반영해 선진국의 배출 권리를 더 허용하고 있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 갈등은 회의 내내 지속됐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18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날 밤 미국이 EU를 제외한 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코펜하겐 합의문’을 완성했다.

덴마크와 EU가 개도국을 배제한 채 작성한 덴마크 문건이 결국 중국의 반발



2009년 12월 12일 코펜하겐에서 행진하는 기후정의 시위대 “이윤이 아니라 지구를”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꾸자”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덴마크 문서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현재 교토의정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미국과 교토의정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이 회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왔다. 협상이 바닥을 향한 경정으로 치닫자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을 주장해 온 한국은 수혜자가 됐다. 자연스럽게 개도국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사다리 건너차기

이번 회의 실패의 책임은 선진국의 개도국 “사다리 건너차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명제 하나로 개도국을 몰아붙였다. 그것도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특히 미국은 ‘중국’이 감축국가가 돼야 자신들도 동참한다는 식의 발목 잡기를 했고, 결국 미국과 중국의 타협이 지구를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은 셈이다.

정상회담 회의장에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연설이 옳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회의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한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지 자기 말만 하고 저기 쪽문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미국이 파산 직전의 은행에 쓸아부른 수천억 달러에 비하면, 연간 1천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는 것에 그저 ‘동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농담으로밖에 안 들린다.”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의 새로운 공적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번 협상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녹색 시키기’

의 휘발쑤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태도도 바뀌어야겠지만 현재의 세계경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을 압박하는 소위 선진국들은 중국의 ‘세계 공장’ 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끊임없는 물질소비와 소비욕망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 회의에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한 나라는 남태평양군소도서국연합(AOSIS)뿐이었다. 그들은 선진국의 책임을 촉구하면서도 개도국 또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국가는 이번 회의에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투발루는 AOSIS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군(V11) 48개국의 지지를 받아 지구 온도 상승 목표를 1.5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백50ppm으로 각각 안정화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회의에서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도움’을 절절히 호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구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UN 협상장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만큼의 힘이 없었지만 회의장 밖에서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전 세계 수많은 NGO들이 이들의 주장을 퍼뜨렸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바로 ‘350’과 ‘기후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들이다. 12월 14일,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대통령은 코펜하겐에 도착하자마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장으로 가지 않고 비정부기구(NGO)들이 마련한 클리마포럼을 찾았다. “지금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바로 스리(3), 파이프(5), 오(0)입니다. 기후변화 재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350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포럼장을 가득 채운 1천 명의 군중은 다 함께 “쓰리(3), 파이프(5), 오(0)”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350’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백50ppm으로 낮추자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캠페인이다.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4백50ppm에서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350’은 이러한 선택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목표를 4백50ppm으로 설정하면 그때는 이미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도서국에서 가뭄과 해수면 상승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난 뒤라는 것이다. 몰디브의 나시드 대통령은 수중 국무회의를 통해 몰디브가 처한 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의제를 주도하던 지도자로 ‘엘 고여’가 고향이라면 이전 새롭게 ‘모하메드 나시드’가 떠오른 것이다.

12월 12일 코펜하겐 시내에는 ‘기후정의’와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위를 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 거대 온실가스 배출자와 그 결과로 인한 희생자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 아프리카, 북극, 아시아, 남태평양 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에 취약해 당장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전망’이 아닌 하루하루의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 NGO와 진보세력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있다.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

코펜하겐 회의 이후 올해 12월 16차 멕시코, 내년 17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논의해야 하는지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어 버린 UN 회의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지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왜 지금까지 세계 빈곤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반성했다. 세계 빈곤과 기후변화는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 빈곤이 확산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그리고 단지 국가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가난한 이들, 한국에서도 에너지 빈곤과 석유파크에 영향 받을 이들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영향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역시 희망은 절망 끝에 있었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국가들과 아프리카, 지구상의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후정의’를 외치는 세계 시민사회가 하나가 돼 가고 있다. 애초부터 화려한 회의장에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온갖 정치적 수사만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기후변화 이슈를 조직하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들에 기대를 걸었어야 했다. 이들은 지금 ‘지구의 파국’을 막기 위한 ‘새롭고도 전 지구적이며 담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정부는 이 담대한 흐름에서 한참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국제 무대에서 모두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혼자 ‘4대강’을 이야기하는 한국 정부였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기자회견장은 기자들의 참석 부족으로 파리만 날리고 예산을 낭비했다. 전 세계 기자들의 관심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이지 한국의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 벨라센터에 설치된 4대강 홍보 부스는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기금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개도국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홍보한 돈을 녹색성장 홍보에 썼으니,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

게다가 한국이 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한다고 신청했다. 2012년 12월은 한국의 대선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린다. 그 여수선한 정국에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를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나 될 것이며, 안 그래도 언론 통제에 능하고, ‘녹색 이미지’ 홍보에 열 올리는 지금의 정부가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조차 정치적인 활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러기에 한국 사회 내에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풀뿌리 운동이 중요하다. ‘그린워시’ 전략을 한껏 활용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동시에 아래로부터 대안을 만들어 가는 활동이 중요하다. 현재 기후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몇몇 환경 NGO들의 활동으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 노동도 농민도 문화도 여성도 기후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 이렇게 풀뿌리 기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보진영 내부에서 기후운동 확산 방식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 관련기사 14, 15면

유럽 경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전 세계 기업주와 정치인 들은 경제 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리라는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2010년을 맞이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정치·사회적 긴장”이 2010년에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에 자문을 해 주는 옥스퍼드 애널리티카의 수석 컨설턴트 샘 월친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에 사회적 불안이 더 커질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에 경제 위기는 시위와 반란으로 이어졌고, 아일랜드와 라트비아에서는 정부가 실각하기도 했다. 1년 전에 정부들은 은행과 산업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느라 돈을 풀었다. 그런데 이제 정부들은 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려고 달려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그리스가 관심의 초점이 됐는데, 유럽연합과 IMF는 그리스에게 재정 적자를 매우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한다. 그리스의 국제신용등급은 하락했다. 그리스가 유로권에서 이탈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막바지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주요 경제국들이 공식적으로 침체 국면을 벗어났고 아일랜드·스웨덴·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들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대폭 삭감하면서 침체에서 ‘탈출’했다. 노동자들에게 위기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일자리 감소, 임금 삭감, 공공 지출 축소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 도처에 깔린 지뢰들을 살펴보고 저항의 잠재력을 진단한다.

위태위태한 그리스

그리스는 지난해 세계경제 위기의 중심에 있었다. 정부 부채와 예산 적자 급증,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 나라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로 당선한 사회민주당의 정당인 그리스 사회당(PASOK)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폐기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 게오르게 파판드레우는 2008년 12월 항쟁의 재현을 피하러 노력해 왔다. 국가의 불황 대책에 성난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는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이 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산을 40억 유로나 삭감하려 한다.

2009년 내내 경제 ‘전문가들’은 “회복의 청신호”가 보이며 곧 경제가 안정을 되찾아 파산한 은행을 구제하는 데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출구전략”을 즉시 펼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국가가 금융권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새로운 부도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정부가 그럴 만한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그럴 형편이 못 됐다.

그리스 정부는 2009년에 6백억 유로를 차입했다. 이 돈은 은행에 주는 보조금뿐 아니라 그리스 경제의 주요 기둥인 관광업과 조선업에도 투입됐다.

그러나 침체는 깊어졌다. 세입은 줄고 실업수당은 늘어서 적자가 쌓여 갔다.

그리스가 관심의 초점이 됐는데, 유럽연합과 IMF는 그리스에게 재정 적자를 매우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한다. 그리스의 국제신용등급은 하락했다. 그리스가 유로권에서 이탈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막바지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주요 경제국들이 공식적으로 침체 국면을 벗어났고 아일랜드·스웨덴·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들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대폭 삭감하면서 침체에서 ‘탈출’했다. 노동자들에게 위기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일자리 감소, 임금 삭감, 공공 지출 축소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 도처에 깔린 지뢰들을 살펴보고 저항의 잠재력을 진단한다.



지난해 12월 아테네 거리를 행진하는 파업 노동자들

정부는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렸다. 한동안 이윤을 얻어 주면서도 부담을 국가 예산으로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값싼 신용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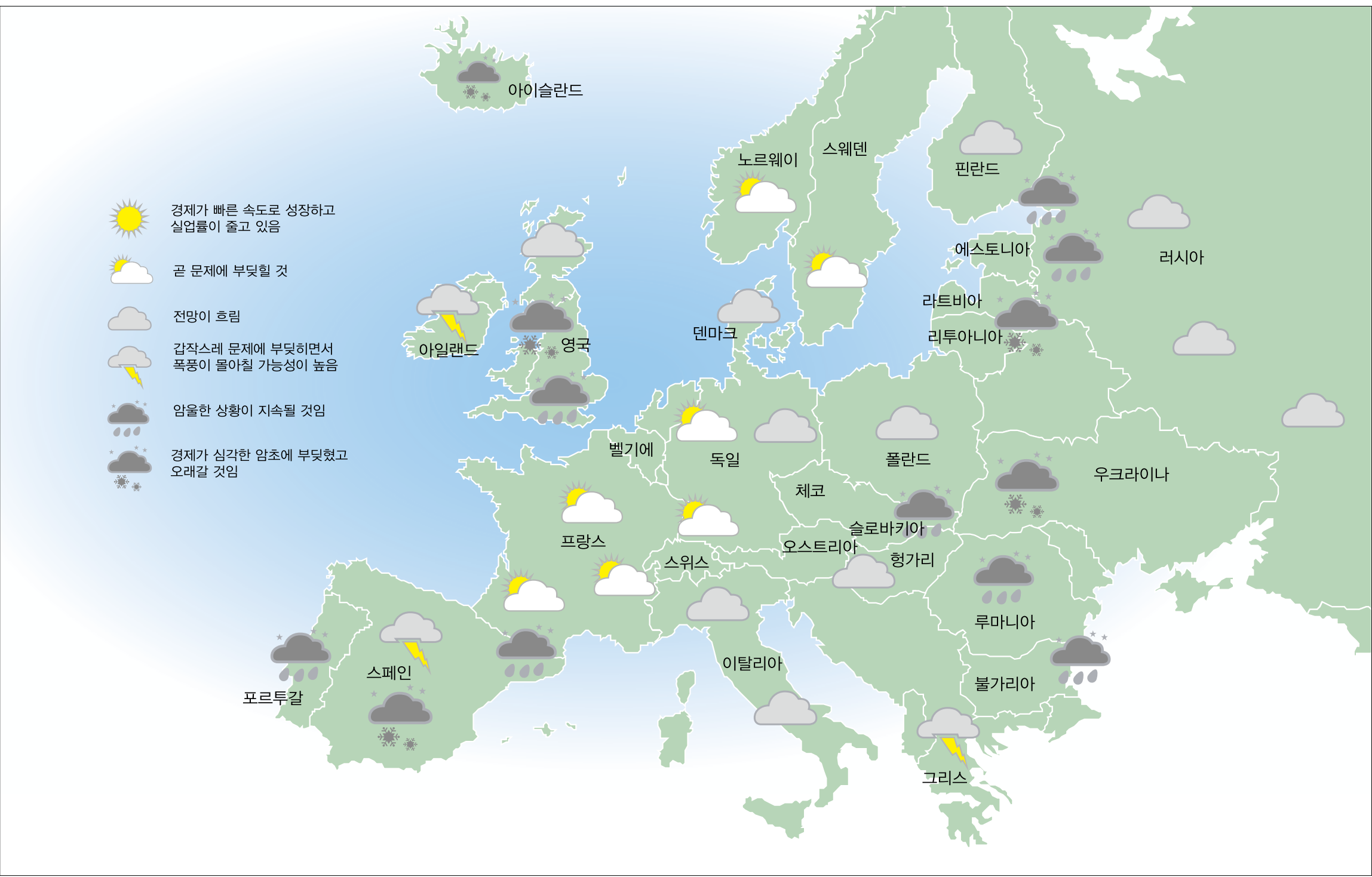
실제로 그리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보기에는 그랬다. 그러나 그리스가 파산에 직면하자 유로화의 수요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그리스의 파산은 유로화 위기를 촉발할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배계급은 그리스가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처럼 밀가 봐 노심조사한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정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주요 은행이 위기를 맞았고 그 결과 장기 불황과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리스 지배자들과 한통속이다.

그리스 사회당 정부는 유럽연합에 이른바 ‘안정화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계획 목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7퍼센트 삭감하고 일자리 10만 개를 임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업 퇴직 자리 다섯 중에 한 자리를 충원될 계획이다. 보건의료 재정은 삭감된다.



- ☀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실업률이 줄고 있음
- ☁ 곧 문제에 부딪힐 것
- ☁ 전망이 흐림
- ☁ 갑작스레 문제에 부딪히면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음
- ☁ 암울한 상황이 지속될 것임
- ☁ 경제가 심각한 암초에 부딪혔고 오래갈 것임

거품이 터지면서 저항이 분출한 아일랜드

1990년대 ‘켈트 호랑이’의 호황은 유럽 신자유주의의 성공담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일랜드는 혹독한 경제 붕괴를 겪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아일랜드는 기술적으로는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온 듯하지만,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이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호황은 미국의 투자 덕분이었다.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한때 아일랜드는 미국의 대유럽 투자 가운데 4분의 1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인구가 고작 유럽 전체의 1퍼센트밖에 안 되는 데도 말이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더 저렴한 투자처를 발견하자 이 자금이 말라 버렸다.

아일랜드 국가는 자산 거품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다. 2006년에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20퍼센트를 차지했다. 노동자 임금 명단 한 명이 건설업에 종사했다. 조그만 마을들이 거대한 배드타운으로 개발됐고, 주택, 병원, 사무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아일랜드의 은행들은 여기에 촉혀 1천억 파운드 넘게 대출을 해 줬다. 이 은행들은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건설업 호황은 대형 부도 스캔들을 낳았다. 개발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정부의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려고 뇌물을 갔다 바쳤다.

이 파업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애매로부터의 거센 압력에서 시작된 총파업이었다. 이런 파업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파노스 기르가나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주권자 (노출자 연대) 편집자



아일랜드 금융 중심가에 설치된 아일랜드 대기근 희생자 동상

4천5백억 파운드가 유입됐다. 이 자금의 70퍼센트 정도는 원래 조세 피난처인 케이먼 군도에 있던 것이다.

투기 과열이 계속되는 동안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두는 데 일조했다. 그들은 그 대가로 권력을 입김을 날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영광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사장들의 정당한 아일랜드 공화당이 현재 집권당인데, 전에는 중도좌파를 자처하던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했다.

두 정당은 함께 노동자 자르기에 나섰고, 구조조정과 새로운 형태의 유연성 도입 복지 혜택을 줄이고, 임금을 깎고, 일자리를 줄이고 싶어 한다.

지금 아일랜드에서는 노동조합과 지역단체들이 정부에 반대해 거의 매일 시위감을 낼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노동자 30만 명이 정부 정책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심지어 경찰관도 파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더 나아가

지 않았다. 임금 삭감 철회와 1만 5천 명 정도, 구조조정과 새로운 형태의 유연성 도입을 맞바꿨다.

물론 정부가 임금을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증대하고 현장조합원 조직화의 힘이 강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사이먼 바스커터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권자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아이슬란드 파산 1년

아이슬란드의 노동계급은 나라 경제가 파산하면서 큰 대가를 치렀다. 60대 노인에게 주는 연금이 20퍼센트 삭감됐다. 중년 노동자들이 그동안 납부한 연금 총액 중 28퍼센트가 사라졌고 25세 미만 노동자들이 부은 연금은 몽땅 날아갔다.

공식 실업률은 10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제 일자리밖에 못 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비를 줄이고자 버스를 이용하지만 버스 운행은 줄었다.

별거 아니라고?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버스를 30분 기다려 보라.

수도 레이카비크 주변 아파트 부동산의 모기지가 50퍼센트 급등했다. 2만 여 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형편이다.

맥도날드가 이 나라에서 철수했다. 1940년대 이래 아이슬란드에서는 코카콜라가 가장 대중적인 음료였는데 더는 그렇지 못하다. 세븐일이 더 싸기 때문이다.

기초 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었다. 심지어 거의 모든 아이슬란드인이 10세기부터 먹던 저지방 고단백 제품 스카이어마저 가격이 올랐다. 향이 포함된 것은 이제 사치품이 돼 버려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향도 없고 맛도 없는 스카이어를 구매한다. 또 다른 특산물인 건어물 가격도 대폭 상승했다.

수도에 있는 벼룩시장 플라포트에서는 식료품 생산자들이 수퍼마켓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한다. 이 시장은 1980년대에 주차장 지하에서 점포 몇 개가 모여서 생겨났다. 이제 그

기적이 신기루가 된 스페인

지금 스페인에서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두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단기 계약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에 국가가 노동자 임금의 부족분을 일부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발의했다.

스페인 경제인연합회는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고자 압력을 넣고 있다. 그레야 기업들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 건설업은 호황을 누리며 단일 부문으로서는 유럽연합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실업이나, 아니면 임금 삭감이나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실업률이 거의 2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유럽연합에서 라트비아를 빼면 제일 높은 수치다. 거의 4백만 명이 일자리가 없다. 지난달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크리

경제를 망치는 신용평가 회사들

정부들은 신용평가 회사의 결정을 두려워 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핏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은 한순간에 한 나라의 등급을 내릴 수 있다.

이 결정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자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고 정부는 지출을 삭감한다.

심지어 등급이 내려갈 것이라는 소문만 돌아도 고약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회사들이 최근의 경제 위



필요성 때문에 이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그러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

1천5백~2천 가구가 식량 저장 배급소에서 매일 식료품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12월에 비축 식료품이 바닥 나서 가부를 호소하고 있다. 이제 레이카비크 시는 어린이집 지원금 가운데 50만 파운드를 삭감하려고 한다.

어린이집 위원회는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인즉, 보육교사의 휴일을 줄이고 청소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것이었다! 농촌 학교들도 폐교될 것이다.

12월에 사람들은 주택 소유주도 교통을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IMF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라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 덕분에 금융 스캔들에 연루된 두 명이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고작 징역 8개월형과 얼마 안 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말이다.

평범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새해를 맞으려면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이 벌어진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사라 엔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스마스 선물을 사 주지 못했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것은 오랜만의 일이다.

게다가 상황은 더 악화하는 듯하다. 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지난 달에 스페인 경제 전망치를 낮춰 점으면서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재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다른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도 스페인을 ‘고통지수’ 1등에 올려 놓았다. 정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이 이유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저항하고 있다. 지난달 수만 명이 마드리드 거리를 행진하며 실업을 줄이고 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안정화할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많은 노동자들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한 평침막에 적힌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다. “한 달이라도 버티고 싶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계획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아직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런 요구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진다면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행동만이 저항의 최선책이 될 것이다.

세티모 로빈슨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권자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기를 불러온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폭락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

이 회사들은 불량 채권에 높은 등급을 매긴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은 불량 채권을 금융계 전체로 확산시켰다.

이런 회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절망에 기생해 돈을 번다.

아무도 이 회사들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번익 차승일

왜 민주대연합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인가

전지윤 기자 | ratm@left21.com

지난해 10월 재보선 때 진보진영은 쓰라린 경험을 했다. 안산에서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하는 데 목매달며 다른 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스스로 사퇴시킬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다가, 민주당의 차디찬 외면 속에 헛물만 켜고 만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교보재용 후보’라는 인식만” 심어 주면서 “민주당 2중대 2소대 2분대가 되어 버린 우리 후보의 표를 박살 내는 아주 치명적인 우”(김창희 민주노동당 남양주시위원장)가 났을 뿐이었다.

이 쓰라린 패배 이후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과 친노신당)까지 포함한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대연합 주장보다는 진보정당들의 단결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진보대연합 주장이 힘을 얻는 듯했다. 민주노총은 공개적으로 “진보정치운동의 대단결과 대통합”을 촉구했고, 진보정당들은 이에 대해 나름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민주대연합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우선 민주당이 밀밭을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1월 7일 “민주개혁진영이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 공조와 연대”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지역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5당과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2010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몇 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반한나라당 선거 연합을 구성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부 사람들이 10월 재보선의 쓰디쓴 경험에서 잘못된 교훈을 끌어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민중의 소리〉는 10월 재보선 이후 “이번 … 실패를 교훈으로 연합을 위한 전략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희망과 대안’의 하승창 상임운영위원은 “강기갑 대표의 [민주노동당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다는] 제안 같은 것이 좀더 일찍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절벽?

홍세화 〈한겨레〉기획위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묻[지만] … 작은 차이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실개천’이 [아니라] ‘절벽’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연대하지 않고 거대한 수구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전 국무총리 이해찬)는 논리에 따라 민주당까지 포함한 민주대연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거나 심지어 ‘절벽’이 놓여 있을까? 현실은 명백히 둘 사이에 ‘사소한 차이’만 있다는 것, ‘절벽’이 아닌 ‘실개천’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명박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추진하기 전에, 민주당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있었다. 이명박의 노조법 개악 전에, 민주당 정부의 비정규직 약법이 있었다. 이명박의 쌍용차 살인진압 전에 민주당 정부의 쌍용차 해위매각이 있었다. 이명박



2006년 민주노총 집회 한나라당과 손잡고 개악을 해 온 민주당과 동맹해서는 일관된 반MB가 어렵다.

사진 임수현 기자

의 4대강 삼입 전에 민주당 정부의 새만금 삼입이 있었다.

이명박이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선진화’라고 포장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기 전에 이미 〈자본론〉을 판 서점 주인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간 민주당 정부가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중요한’ 질적 차이가 아닌 ‘사소한’ 양적 차이일 뿐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그토록 동요하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다 거듭 진보진영의 뒤통수를 쳤던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지원도 “지난해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노동법, 예산이라는 5대 쓰나미에 한 가지도 승리하지 못하고 싸우지도, 타협도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이명박의 개악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은 거듭 “믿는 도끼에 가sum을 찍힌 격”(2009년 연말 정국 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이 됐다.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점이 단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 주며, 따라서 ‘과거를 묻지 말고 현재를 보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그동안의 민주당 행태에 대해 “한치의 부끄럼도 없[고] … 별로 반성할 지점을 못 찾겠다”(〈민중의 소리〉1월 4일치)고 했다.

물론 민주당이 선거 승리와 민주대연합 성사를 위한 속임수로 몇 가지를 약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악마의 기독과 개종 약속을 믿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자본가 정당이기 때문이다. 자본가 계급에 기반해서 그 인력과 재정으로 주로 운영되는 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는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펼쳐 왔고 그것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계급적 이해관계는 쉽게 바뀔 수 없다.

주고받기?

따라서 민주대연합을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진보정당들은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는 ‘주고받기’는 가능

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조국 교수는 “연합의 공통분모를 만들려면 … 개혁정당들이 좌로 한 걸음 [가고] … 진보정당들도 우로 한 걸음”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계급적 한계 때문에 제스처 수준 이상으로 좌로 갈 수 없고,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세균은 “최고의 선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에게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양보와 결단과 포기”를 요구했다.

결국 이런 민주대연합에서 진보진영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다.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연합을 하려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구와 강령을 낮춰야 한다. 이미 ‘희망과 대안’의 하승창 상임운영위원은 “민주당도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 내야 한다”며 파병과 한미FTA 등 “지나간 것을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레디앙) 2009년 10월 26일치)

〈민중의 소리〉의 ‘제 눈에 물 대기’

〈민중의 소리〉는 요즘 앞장서서 민주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지난해 말부터 ‘반MB연합 경험과 전망’이라는 집중기획을 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민주대연합을 정당화하려고 제 눈에 물 대기식 주장을 편다.

〈민중의 소리〉는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김상곤 모델’을 “반MB연합의 모범사례”로 꼽으며 민주대연합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그러나 ‘김상곤 모델’은 민주대연합의 사례로 보기 힘들다. 당시 경기도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은 주로 진보진영 다수파의 지지를 받던 김상곤 후보와 급진좌파의 지지를 받던 권오일 후보였다.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 끝에,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단일화에 성공했다.

반면 진보 단일 후보가 된 김상곤 후보와 친민주당 송하성 후보의 단일화는 공식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승산이 거의 없던 송하성이 후보 자격 문제로 스스로

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차단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재보선 때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려 하자 민주당은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부정하는 행위는 예의가 아니다”라며 “무엇이 같은지 왜 같이 가야 하는지 그것만을 생각하라”고 큰소리쳤다. 이처럼 진보진영의 요구가 축소되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입막음당하면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노동자 투쟁에서 진보진영은 손발이 묶이게 된다. 이것이 민주대연합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선거에서도 민주대연합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진보정당이 ‘민주당의 2중대’라는 이미지와 사표 심리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진보진영이 스스로 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한 거름이 되는 격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거름으로 썩어 가도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서 더 잘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설사 진보진영을 거름 삼아 당선해도 한나라당에 굴복·타협해서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진보진영을 배신할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을 심판하려고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냉소와 환멸을 조장할 것이다. 그 결과 다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기가 살아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대연합 추진은 진보진영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1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정치 대통합 추진’을 결정한 것은 반갑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대연합을 위한 불쏘시개나,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투트랙 전략’이 돼선 결코 안 된다.

진보진영과 진보정당들은 민주대연합과 분명히 선을 긋고 쉽지 않더라도 진보진영의 단결 투쟁과 통합, 선거연합 추진으로 분명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김상곤(좌)은 반MB 연합 후보가 아니라 권오일(우)과 손잡고 단일화한 진보 단일 후보였다.

사퇴했을 뿐이다.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상곤 후보의 선거 운동에 일부 참가한 것은 사실이다. 대안 부재 상황에서 대체에 끌려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적인 선거 연합 세력으로서 정책이나 공약의 변경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도 않았다. 선거에서도 김상곤 후보가 당선하는 데 큰 구실을 한 것은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과 조직 투표였다. 따라서 ‘김상곤 모델’은 진보선거연합의 성공 모델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

〈레프트21〉은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의 탄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명 기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이 말하는 삼성의 악행

이건희 사면이 발표되던 날,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던 **이종란** 씨는 경찰에 연행됐다. 그가 연행 당시 소감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레프트21〉에 편지를 보내 왔다.

2009년 12월 29일은 참으로 악몽 같은 날이 아닐 수 없다. 이건희 사면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집 앞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체포영장도 없이 수원에 있는 나의 집까지 찾아와 나를 강제로 차에 태워 수원 남부경찰서로 이송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http://cafe.daum.net/samsunglabor>)이 개최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추모제가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제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일은 낯선스가 아닐 수 없다.

너무도 억울해, 나는 저항의 의미로 진술거부를 했는데, 아무런 혐의 파악도 하지 못한 경찰은 갑자기 체포된 지 7시

간 만에 나를 석방했다. 반올림과 수원 시민대책회의(수원촛불단체연합), 다함께 경기남부지회 등이 발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이건희 사면 반대여론에 더해 여러 인터넷 언론의 몰살을 타자, 이건희 사면 행보에 누가 될까 봐 갑작스럽게 풀어준 듯하다.

사실 체포돼 경찰서에 끌려가서야 이건희 사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분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실감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추모제의 주인공인 백혈병 사망 노동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

삼성반도체는 우리 나라 수출 품목 1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연일 최고 매출 행진을 자랑하고 있으나, 성장의 이면에 너무도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이 공장을 다니면서 2교대, 3교대 근무로 공장과 기숙사만 오가다가 20~30대에 희귀암에 걸려 세상을 떠

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계암에 걸린 노동자가 22명이 넘는다. 화학물질 중독으로 평생 잘 걷지 못하게 되고, 뇌종양, 루게릭병, 유산, 불임, 기형아 출산, 생리불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것은 바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백 종의 화학물질과 유독가스, 방사선(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는다) 때문이며 최대물량을 뽑아 내기 위해 기계의 ‘안전보호장치’를 해제시키고 작업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나 검찰, 경찰, 사법부는 그동안 삼성의 뇌물로 단련돼 철저히 노동자들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피해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은 법원에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반올림은 삼성의 산재 은폐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고 삼성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런 활동들이 불씨가 되어 멀지 않은 미래에 삼성 노동자들이 무노조 경영을 끝낼 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신해철 소환— 국가보안법으로 입 틀어막기에 반대한다

검찰이 가수 신해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것이라고 한다. 신해철 씨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북한 로켓 발사 경축’ 글을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는 신해철 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이자,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견해 표명조차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막는 것엔 절대 반대한다. 한 연예인이 그저 가볍게 인터넷에 끼적인 것을 사상탄압법으로 조사하려 드는 것도 어이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60여 년 동안 지배자들의 유용한 무기였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사상의 자유를 짓누르고 진보진영의 일부를 마녀사냥함으로써 분열·위축시키는 구실을 해 왔던 것이다. 이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활동가를 연행해 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산참사를 1년 만에 해결하는가 싶더니, 양보에 대한 우파들의 반발이 거세자 급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의 막가파 탄압에 제동을 걸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위협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나지현

구속노동자의 새해 인사

너무나 고맙습니다. 〈레프트21〉은 저의 협소한 프레임의 지평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아무런 방해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보이니 특히 MB의 비틀거리는 행보는 눈과 귀가 멀쩡한 게 오히려 고역입니다.

얼마 전 도둑놈 하나를 특사해 걸렸하면 내세우던 법치를 우롱했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지.

자본에 대한 통제력 부재와 자발적 복종의식은 어떻게든 깨야만 하는데 저는 한없이 깊은 무기력에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체 게바라의 ‘리얼리스트가 되라. 다만 불가능한 꿈을 가슴에 안고서’를 되뇌며 투쟁.

〈레프트21〉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저 푸르른 하늘 크기만큼만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건설산업노조 조합원 이기호 올림

강동훈 기자의 교원평가제 입장에 대한 반론

강동훈 기자는 21호 독자편지에서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반대하지만, 민주적 교원평가제 도입도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도입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자주적·민주적 운동과 의사표현을 지지·고무”하기 위해 민주적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특정 요구들은 특정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가 부자연스러워 대중에게 둔기호테식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교조 지도부는 11월 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폐제를 위한 협의기구인 ‘6자협의체’ 참석을 통과시키려 했다(강동훈 기자가 “교원평가제에 대해 언제나 전교조 비판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래서 반론의 번지수가 틀렸다).

전교조 지도부는 ‘6자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원 평가를 포함시킨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동의하고 타협하려 했다.

그런데 교차사 소속 대의원들이 대의

원대회 보이콧 선동을 했고, 결국 대회가 무산됐다. 이들이 옳았고 전교조 지도부가 틀렸다. 좌파는 지도부의 모호하고 동요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을 지지해야 한다.

그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민주적 교원평가제 도입 요구는 “원칙”을 설파함으로써 상황의 본질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전선을 교란시키는 것일 뿐이다. 상황의 본질은 정부가 경쟁과 통제를 강화할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 운동도 학생 권리의 관점에서 요구를 제기하고 운동을 건설하려고 촉구하는 것”은 얼마나 작위적인가.

물론 사회 변혁 운동에서 학생 등 피억압자의 민주주의 문제는 실로 중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으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럴 때 작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요구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강동훈 기자는 구체적인 문제를 추상적인 문제로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김인식

좌파들은 청소년들의 조직과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요즘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에 따른 논쟁이 거세다. 일부 우익들이 김상곤 교육감을 공격하는데 맞서, 많은 진보적 청소년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 단체를 제외한 다른 진보·좌파 단체의 진정한 관심이나 연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프트21〉지난호 기사에서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총체적인 지지는 있었으나 청소년들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몇몇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송조은 양의 의견을 실은 것은 다른 언론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일이지만, 자칫 청소년들은 단결된 조직이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나는 진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다. 그러나 대한

민국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없다. ‘교육’이라는 단어로 폭력을 미화하는 학교에 어디 인권이 있단 말인가.

두발규제만 해도, 단순히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두발을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학생들에게 노예의식과 복종의식을 주입한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 현실을 바꿀 청소년들의 조직적인 단결과 투쟁이다. 자유를 쟁취하려는 청소년들의 투쟁은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이며, 좌파들은 청소년들과 함께해야 한다.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상곤 교육감을 방어하고 무상급식과 인권조례안 추진을 촉구하는 것이고, 나아가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하는 것이다.

권용석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오바마 취임 1년 — 오바마의 미국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연사: 김용욱 〈레프트21〉기자
일시: 1월 20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2-447-0397, 010-8439-0502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오바마 취임 1년 — 오바마의 미국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연사: 조명훈 〈레프트21〉기자
일시: 1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OGV 옆)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 010-3362-1968

서울 서부 사회포럼
오바마 취임 1년 — 오바마의 미국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연사: 김용욱 〈레프트21〉기자
일시: 1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신촌 토즈 비즈니스터 (신촌역 8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문의: 02-324-3400 | 010-7214-1157

서울 남부 사회포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 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기자
일시: 1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터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참가비: 4천 원
문의: 02-416-0963, 010-5784-3175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자본주의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질까?

연사: 선영 (다함께 활동가)
일시: 1월 20일 (수) 오후 4시 30분
장소: 중앙대학교 문과대 608호 (7호선 상도역이나 1호선 노랑진역 1번버스타고 후문 정차/ 9호선 흑석역에서 500미터)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한국 여성 차별의 현실과 그 뿌리

연사: 김세란 (다함께 활동가)
일시: 1월 27일 (수) 오후 4시 30분

장소: 연세대학교 용재관 203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풍요 속의 빈곤 — 왜 21세기에
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을까?**

연사: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
일시: 2월 3일 (수) 오후 4시 30분
장소: 고려대학교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여성부가 이른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퍼플잡)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부도 인정하듯이, 한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7퍼센트)이 OECD 최하위인 터키, 멕시코보다 조금 높아 최하 위권이고, OECD 국가들 중 출산연령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유난히 두드러진다.

한국 정부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육아 문제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표방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일·가정 양립’을 외치는 동안에도 한국 정부는 실제로 여성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하는 데는 늘 인색했다. 그 결과, 0~5세 아동 중 30퍼센트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출산 전후로 취업을 유지한 경우는 약 13.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노동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도 2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2006년).

인색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이조차 활용할 수 없는 여성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여성의 평생직장 개념이 거의 없고, 출산 후 재취업까지 평균 9.7년이 나 걸린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경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을 방문해 퍼플잡을 설명하고 있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신종 비정규직’이 될 ‘퍼플잡’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력단절 여성 채용 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육아기 단시간 근로시 육아휴직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일부 개선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조차 불충분하고, ‘퍼플잡’처럼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도 많다. 정부가 경력단절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퍼플잡’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실직한 여성들을 단시간근로로 고용하는 제도다.

기업주들이 풀타임 장시간 고용만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전체 여성 고용 중 주당 40시간 이상

장시간 여성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육아기 여성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단시간노동을 하더라도 기존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임금 수준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 뒷받침돼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퍼플잡’ 발표 이전에 이미 이런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 지원도 거의 없고 기업을 제재할 방법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해고 없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

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이미 실직한 여성들에게 임금도 적고 경력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도 불안정해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큰 ‘퍼플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시간 근로의 특성상, 그나마 보조적 업무에 한정될 공산이 크다. 결국 출산과 육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직장에서 쫓겨난 여성들에게 일하고 싶으면 저질 일자리나 받고 감지덕지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유연노동이 늘어나는 것은,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차

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로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OECD 최약의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한 해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급 육아휴직을 모든 노동자들이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일이다. 또한 양육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질 좋고 값싼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송재혁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인터뷰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불도저 삼질 정권다운 발상”



사진 이윤선 기자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도저 삼질 정권다운 발상이죠. 정부가 하고 싶으면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이 독재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구성하고 그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협의체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것인데, 정부는 협의체의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제 강행은 국민들의 인기를 끌 만한 아이টে이 돼 버렸죠. 이 인기 아이টে이를 한 나라당이 선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전교조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했다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정치 의지를 통해서 관철시켰다고 비쳐질 바를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도 [교원평가제]는 교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지난 정권 때부터 구성돼 왔죠.

교원평가제가 실제로 노리는 것은 학교에서 시장화 교육과 경쟁 교육, 차별화 교육을 더욱 강행할 때 교사들을 강제적으로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원평가제죠.

또 내부적으로는 교사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에 강력하게 묶어 두려는 수단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제가 정부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교원평가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맞서서 이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육은 완전히 썩었는데, 그 원인은 교사가 아니라 대학 서열화, 입시 경쟁만은 교육에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제의 핵심적 본질이 있는 것인데, 그동안 교사를 공격하면서 모든 교육 문제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가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형적 교육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나가며 국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대량해고에 맞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노동자들이 사측의 대규모 해고에 맞서 부분파업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11일부터는 투쟁 수위를 높여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하반기 세계 경제 위기 전까지 다른 조선사들과 마찬가지로 호황이었다. 2006년에는 세계 7위였다. 한진중공업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이 무려 4천2백77억 원 흑자였고, 2009년도 3분기 이익잉여금이 무려 1천6백86억 원,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1천56억 원”이라고 한다. 조선 부문 가동률도 신조선의 경우 86.6퍼센트, 특수선은 무려 1백10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주한 결과로 지난해까지는 흑자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지난해에 선박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자 “안으로는 일감이 없고 밖으로는 경쟁자(중국)가 기세등등한 내우외환의 상황”이라며 전체 노동자 2천8백명 중 30퍼센트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노동자들은 어떤 책임도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위기의 원인은 해외공장을 건설하는 등 과잉투자에 따른 과잉생산 체제와 선박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무능경영”에 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주로 컨테이너선을 건조했기에 세계경제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한 겨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전부터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담을 강요했다.

고통 전담

협력업체 12곳이 도산해 일부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그 다음에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1천여 명도 해고했다. 회사측은 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렸고, 수습기간의 임금도 급여의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낮췄다. 사측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인 협력업체와 하청 비정규직부터 해고한 다음 이제 정규직에게 대량해고의 칼을 겨누고 있다.

반면, 2008년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배당금 1백20억 원을 챙겼고, 2009년 9월까지 지급된 사내이사 평균급여는 1억 6천9백만 원이다.

현재 사측은 한진중공업지회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노사협’만 고집하면서 1월 26일에 해고 명단을 발표할 기세다. 한진중공업지회는 “수주 부진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조남호 회장 부자 때문에 노동자들이 죽을 수는 없다”(채길용 지회장)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회와 진보정당들도 연대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4백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사측은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절망퇴직’을 늘릴 것이다. 퇴직이 늘어나고 해고 명단이 발표되면 소위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단결이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동지의 말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막아내야 한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2009년 4월 등록금 인하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

사진: 양주환 기자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 상한제 무산

지난해 12월 31일에 여야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등록금액 상한제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액 상한제 요구가 발목을 잡아 취업 후 상환제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될 판이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더니 결국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 지금(13일 저녁)까지 합의된 내용은 기껏해야 등록금 인상을 상한선을 두는 것일 뿐이고, 취업 후 상환제도 정부의 누더기 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을 1학기로 앞당겼다고 자화자찬하며 ‘친서민’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려 하겠지만, 취업 후 상환제는 마땅히 1학기에 시행해야 했다. 취업 후 상환제의 내용도 문제다. 정부안은 발표될 때부터 이미 누더기라는 점이 명백했다. 취업 후 상환을 실시하는 대신 50여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장학금과 이자 지원을 없앴고, 이자율을 일반 정책금리보다 훨씬 높은 6퍼센트 안팎의 복리로 적용해 빚폭탄을 안겨 줄 것이 뻔하다. 상환기준 소득(최저생계비만 넘으면 상환 시작)도 너무 낮고, 수능 6등급 미만은 이용하지도 못하게 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액을 1천억 이상 늘릴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등록금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은 채 취업 후 상환제만 실시하면 빚만 늘어날 뿐이므로 취업 후 상환제보다 학생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등록금 액수 제한이다. 그래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

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바로 이 점을 등록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사실 12월 31일 합의는 처음부터 과연 지켜질지 의심스러운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분명치 않았다.

의심스러운 합의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다는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등록금 상정 기준을 근거로 한 ‘원가 상한제’였지,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한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담합하고 예산 뺄뻘이 없다고 우기면 등록금을 낮출 수 없는 안이었다. 등록금넷의 계산에 따르면 심지어 더 많은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대련 같은 학생단체들은 ‘원가 상한제’를 반대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온 등록금넷이 이런 미흡점은 교과위 합의를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한 것은 다소 선불렀다. 취업 후 상환제의 경우도 등록금넷이 주장한 대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할 것인지 불투명했다.

게다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 액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이 합의조차 반대했다. 교과부장관 안병만은 “미국에 비하면 우리 등록금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며 등록금 규제에 반대했고, 등록금 인상 자체 발언을 했던 윤준현도 이를 만에 ‘올해는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동결시키는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등록금 상한제도 “대학 자율화에도 맞지 않”다며 분명히 반대했다.

심지어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한 교과부 간부는 ‘원가 상한제’조차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학 연합회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중앙일보〉도 “아합”이라며 오른편에서 한나라당을 채찍질했다. 이 과정은 한국의 지배자들이 얼마나 철저한 시장주의적 교육관에 입각해 있는지 보여 줬다. 더불어 이명박식 ‘친서민’의 실체도 다시 한번 밑바닥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계속 끌려다녔다. 12월 31일 합의 과정에서 국회 교과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중요한 몫을 하긴 했지만, 당시의 합의 내용은 그동안 등록금넷이 주장해 온 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원가 상한제’였고, 나중에는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등록금을 상한제’로 금방 타협점을 옮겼다. 취업 후 상환제도 사실상 정부안을 거의 손대지 못한 수준으로 합의될 듯하다. 취업 후 상환제가 1학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야당 탓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정부 협박에 휘말려 수세적인 태도로 합의 그 자체에만 목매단 감이 있다.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이 이번에는 무산됐지만, 등록금을 규제하도록 투쟁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에 지배자들이 보여 준 엄청난 반발은 등록금 규제를 강제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대중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의 약속보다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고통전가에 맞선 운동이 필요하다.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략시킬 구조조정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학교는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5개 계열로 나눠 10개 단과대, 40개 학과·학부로 줄이는 등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비인기 단과대학을 하남 캠퍼스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2008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성은 “대학은 현실적으로 이미 직업교육이 됐다”며 “회계·한문·영어처럼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걸 더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때문에 중앙대의 모든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기초회계 과목을 수강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이미 학사과정이 바뀐 상태다.

이번 구조조정안에는 중앙대 신입생 정원 4천5백여 명 중 경영대 정원을 최대 1천2백 명까지 확대하고, 인문대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한 독어독문학과 등은 아시아문화학부, 유럽문화학부 등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됐다.

또, 금융공학·국제물류학·의생명공학 전공을 신설하고, 공과대학에는 인공지능·로봇공학·의료공학·에너지공학 등의 전공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분야들은 두산 그룹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대는 노골적인 ‘취업준비학원’이자 두산그룹을 위한 저렴한 기술연구소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대학 지배

기업의 직접적인 필요에 맞춰 대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중앙대학교의 주장은 결국 대학 졸업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은 이명박이 청년실업 문제를 다룰 때마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윤준현이 “취업 자격이 여의치 않으면 졸업이 여의치 않게 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도 일어나야 청년 실업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실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이런 논리에 따라, 그동안 대학들은 졸업 요건에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영어 강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하며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처럼 대학 4년을 보내라고 강요해 왔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근본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사 구조조정으로 중앙대 졸업생들이 취업에서 유리해진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결국 다른 대학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옥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용성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고 “대학 시스템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기업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막는 것을 뜻한다. 이미 중앙대는 학교민주주의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를 2009년 2월 폐지했고, 3월에는 교수연봉제를 도입했다.

이번 구조조정 추진 과정도 비민주적 운영의 전형이다. 지난해 12월 30일에 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열렸지만 “브리핑만 진행된 채 학생대표자들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해 주지 않고 끝나 버렸다.”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톱-다운(상의하달)식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당국의 방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또, 구조조정안에는 5개 계열별로 ‘책임 부총장’ 5명이 각각 예산, 교원 임용, 인사 등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 줬는데, ‘책임 부총장’들이 평가 받는 기준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일 것이다. 결국 “자유로운 학문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은 점차 사라지고, 교수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 성과를 내놓기 위해 경쟁해야만 하고 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익히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기업의 대학 지배 때문에 ‘이공계’에서는 연구 주제조차 기업의 요구에 철저히 종속되고 있고,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정부·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 받을 것이다.

이는 중앙대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진중권 교수를 해임한 일, 기업의 대학 지배를 비판한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를 강제 수거한 사건,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에 보복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를 ‘인문한국연구지원사업’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킨 사건 등에서도 잘 드러났다.

모든 학문 연구와 교육을 기업의 직접적 필요에 종속시키는 것은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가로막고 대학 생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경쟁으로 내몰고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중앙대의 이번 구조조정뿐 아니라 기업의 대학 지배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강동훈 기자 kah@left21.com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풀무질’을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종복 풀무질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 기관에서 매주 한두 차례씩 서점에 찾아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서적과 진보 단체의 기관지 등을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하루 두세 차례에 이를 정도로 사찰이 부쩍 강화됐고, 서점주위를 활형하거나 서점에서 토론을 벌이는 학생들의 대화를 엿듣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사찰이 이뤄졌다. 심지어 은 대표를 미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공안기관은 지난 1997년에도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은 대표를 남영동 대공본실로 끌고 가 구

속한 바 있다. “책방을 통해 세상을 맑고 밝게 하려는 뜻”을 가진 대표에게 보안 경찰은 “감옥을 나가면 책방을 그만두고 술집이나 하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서점에서 《서울에 사는 평강 공주》 같은 시집도 이적표현물이라며 압수해 갔는데, ‘평강 공주’를 ‘평양 공주’로 잘못 본 것일 터이다. 대형 서점에서 판매하는 《자본론》 같은 책은 물론이고, 등산 모임 소식지도 압수했다. 입만 열면 ‘국가 안보’를 달고 다니는 공안 기관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다.

은 대표는 10년이 훌쩍 더 지난 지금도 정부가 버젓이 사찰을 하는 것에 분노해 이 사실을 알리며 저항하고 있다.

은 대표는 “책방 하는 사람이 책 팔았다

고 잡혀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한심하다”며 “내가 어떤 책을 팔든지 상관하지 마라”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가 사찰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명박은 경찰력 아니면 하루 만에 무너지는 정권이지요. 공권력의 힘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책방이 진보적 책을 팔면 그 균열이 빨리 갈 것 같아 사찰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인문·사회과학 서점에 대한 일상적 사찰 등 정권이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터뜨리는 ‘공안’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서적 판매·영업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일간지에 실린 중앙대 광고 두산그룹(DO)의 구조조정은 “상상하지 못했던” 대학을 만들 것이다.

최혜원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인터뷰

“사람들의 지지가 해임 취소 판결의 주된 원동력”



사진 이미진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행정법원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 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해직 교사 중 한 명인 최혜원 교사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들어 봤다.

먼저 ‘해임 부당’ 판결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복직 소식을 들으니가 왠지 첫 발령 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빨간 내복을 골라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어요.

이 1년이 거저 얻은 1년이 아니잖아요. 교사는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은 제 삶을 뒤흔든 큰 경험이었는데, 이 경험들을 어떻게 살려서 아이들을 마주할 것인가, 내가 교사로, 또 인간 최혜원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은] 해직 취소됐다는 얘기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데, 그렇다고 울거나 감동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파마 어울리시네요”, “내일 다시 오시나요? 몇학년 몇 반이에요?” 같은(웃음, 당연한 일을 겪은 듯한, 그런 반응이죠.

이번 판결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해직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죠. 해임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결한 만큼 교과부가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벌이면 교사를 교직에서 내쫓는 징계는 못

하게 됐죠.

그러나 ‘일제고사 자체가 위법이다’ 하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 점에선 교과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죠. 일제고사로 해직을 당하고 1년 넘게 고생했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일제고사가 위법이란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일제고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당장은 기쁘지만 훗날을 생각하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어요. 절반짜리 판결이죠.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주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해직 교사들이 옳은 것은 옳다는 믿음을 갖고 온갖 팔자를 다 받으면서도 독심 있게 밀고 나갔잖아요. 그게 결국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 낼 만큼의 성과를 내고,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투쟁이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저희는 지지도 많이 받았어요. 7명 해직당한 게 80년대에 1천 명씩 해직당한 것에 비하면 많지도 않았는데 관심을 많이 받았지요. 당시 촛불 정국 직후인데다 촛불 강경 진압에 대한 분노가 커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아고라나 인터넷을 통해 교사 해직 문제가 이슈로 달아



사진 임수환 기자

2008년 12월 한 해직 교사의 제자들이 부당 해직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올라서 굉장한 힘이 됐어요.

1월 4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돼 교사 14명이 해임 처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특히 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전교조는 정말 거대한 조직이에요. 전교조 20년의 세월은 정말 대단한 세월이라고 봐요. 교사 한 명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이명박 정부는 누가 가장 무서운 적인지, 어떤 적을 먼저 탄압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봐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 교육”을 하는, 그래서 아이들의 의식을 바꿔 놓는 그런 전교조가 가장 큰 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싸워 갈 계획인가요?

1차적인 목표는 원직 복직이지만 그후에도 일제고사가 현장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 싸워야겠죠.

인터뷰·정리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폭설, 한파 등 세계적 기상이변

지배자들의 무능과 이윤 추구가 기후 재앙을 부르고 있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홍수 등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4일 한국에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1백 년 만의 폭설과 1985년 이후 가장 길게 유지되고 있는 한파 기록도 그 일부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 폭설과 한파로 1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곳곳에서도 한파와 폭설 때문에 교통과 난방 체계가 마비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전력 수요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난방용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북반구가 추위에 시달리는 동안 남반구에서는 홍수 피해가 이어졌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스물한 명이 홍수에 휩쓸려 숨졌고 호주에서는 폭우가 열흘 넘게 내려 남동부지역을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불과 며칠 만에, 영화 <투모로우>나 <2012>에서나 볼 수 있던 기후 재앙이 우리 옆으로 바짝 다가온 듯하다. 그런데 이 모든 기상이변이 지구온난화와 관계있을까?

핀볼

물론 지구온난화는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의 추세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한두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온난화’와는 다른 기후 현상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상학자들은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한파와 폭설이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른바 ‘북극진동’(AO)으로 알려진 것인데 지난해 12월 북극 지방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1백 년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도 남짓 오를 것만으로도 자연재해 빈도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이는 충격적인 변화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 때문에 극지방에 갇혀 있어야 할 한랭

한 공기가 응집력을 잃어 남하하면서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우리 나라 쪽으로 강하게 몰려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 카네기연구소 지구생태부는 1978년부터 2001년까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2008년에 발표한 연구 보고에서 북극지방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막는 제트기류가 온난화의 영향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알베도’ 효과인데 지난해 늦가을부터 시베리아 지역에 16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예전보다 훨씬 넓은 면적(한반도 면적의 세 갑절 이상)이 몇 달째 하얀 눈으로 뒤덮혀 있다. “눈 덮인 면적이 넓을수록 햇빛을 많이 반사하므로 지표면은 더 차갑게 식게 된다. 이 때문에 시베리아 고기압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평년보다 훨씬 세력이 강한 상태이고, 비교적 변질이 안 된 채 우리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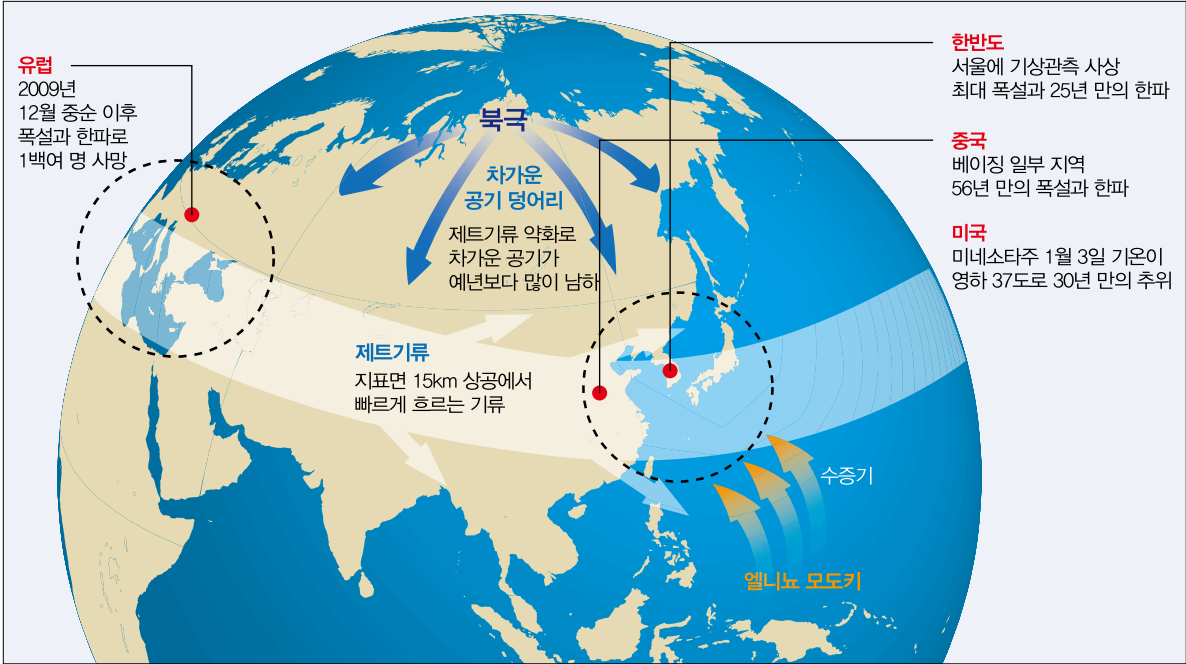
게다가 올해에는 “열대 중태평양을 중심으로 정상 수온보다 1.9도 정도 높은 이른바 ‘엘니뇨 모도키’라는 이상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여름에 시원한 맥주컵에 물방울이 맺히듯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남쪽에서 발달한 온난다습한 기류와 만나면서 폭설을 쏟아붓고 있다. 남반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만 계절상 여름이라 집중 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한 홍수 피해가 벌어졌다.

이런 설명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힘껏 쳐올린 핀볼이 미친듯이 튀어다니다가 지구 전체의 기온이 높아질수록 예측하지 못한 기상 이변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협약을 만드는 데 실패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 폭설과 한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제는 세계 지도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 세계 활동가들이 4월에 볼리비아에서 열리는 ‘대안 기후 회의’에 모일 예정이다.



‘폭설 대란’ 책임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1백 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1985년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되는 한파 앞에서 서울의 “도심 기능은 마비”돼 버렸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지역의 기후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며칠 만에 채소 등 생필품 가격이 수십 퍼센트씩 오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상 이변으로 수송 체계가 마비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준비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작 이 정도 날씨 변화에 수도권에 사는 2천 5백만 명의 삶이 고단해진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는 서울의 핵심 도시 기능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된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최근 이명박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도시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1호선 전철의 고장과 지연 운행 문제가 대표적이다.

‘폭설이 오면 지하철 타라’?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폭설이 아니라 인력 부족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전철역으로 통하는 계단과 승강장에 눈이 쌓이고 살얼음이 얼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지만 미처 손을 나누지 못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중에 발생하는 고장을 조치하기 위해 각역에 배치된 기동검수도 없애 버렸다. 이번 폭설로 열차 출입문 등이 고장 났을 때 기동검수가 있었다면 훨씬 빠르게 열차운행을 정상화시켰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설이 오면 지하철 타면 된다’던 이명박의 발언은, 눈길

속에 발을 동동 구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부아만 뿔었다.

서울시의 도로 길이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데 이 도로 전체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 장비는 고작 1백여 대에 불과해 아직도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다. 달동네에 사는 노인들은 집 밖에 나서지도 못하고 먹을 것과 연탄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해야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되려 이 모든 책임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백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연말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라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경제 위기는 기후변화와 고통이란 고통은 모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한다.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이강택 / KBS PD /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 오일쇼크의 배후' 등 연출



해가 바뀔을 틈타 ‘國格’(국격)이니 ‘國運’(국운)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옛 단어들이 부쩍 많이 동원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이며, 소위 ‘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운이란 특정 계급의 이익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도무지 개념조차 불분명하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깔고 있는지 알 수 없는(사실은 의도적으로 뭉개 버리는) 전근대적 어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난무한다.

아마도 무조건적·봉건적 통합을 내걸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공동체 내의 갈등과 해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운수소관으로 돌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미래가 불안한 상황임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한 지배자들의 언술일 것이다. 하여, 이명박과 조중동이 ‘국운 융성’을 들먹거릴 때마다 내겐 오히려 스파르타의 멸망이 연상되곤 한다.

주지하듯이 스파르타는 강국이었다. 몇 해 전 상영된 영화 ‘300’의 과장된 스펙터클에는 못 미치지만,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 10만 대군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입혔고, 뒤이어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는 폴리스 중 최강자로 군림했던 아테네를 꺾어버릴 정도였다. 그러나 《영웅전》의 저자 플루타르크에 의해 극찬을 받았던 무적의 스파르타, 비옥한 라코니아 평야에 헤라클레스 직계 후손들이 세운 도시국가의 영광은 아테네를 이긴 지 불과 30년 만에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전장에서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로마의 연속지로 전락해 갔다. 스파르타는 자멸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스파르타의 급격한 쇠락은 필연적이었다. 아테네 등 여타 폴리스들에서는 지배계급(자유시민)과 노예의 비율이 1 대 3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경우는 그 비율이 무려 1 대 20을 넘었다. 따라서 1만 명

정도였던 지배층들은 항시 20만 피지배층의 반란 위협에 시달렸고, 극도의 수적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혹독한 견제와 감시체제를 운영했다. 지배계급 성원들은 문화와 지적 교양 대신 오직 신체 단련에만 몰두했고, 크뤼테이아라고 불리는 비밀경찰 혹은 청년단들이 뛰어난 노예들을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스파르타 지배층은 극도로 탐욕스러웠고 배타적이었다.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중간계급들에게조차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독점한 토지가 분할되는 것을 막으려고 스스로도 출산을 기피했다. 거듭된 전투로 사망자들이 늘어 갔음에도 오직 자신들의 계급적 특권을 수호하기 위해 소수정예주의와 이른바 스파르타식 교육에 매달렸다.

부자들은 재산 감소를 염려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부양 능력이 없어서 출산을 꺼리고, 그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배체제가 더욱 경직되는 악순환….

마침내는 당시 전력의 핵심인 중무장보병(그리스 시대에는 모든 병사가 스스로 무장을 해야 했는데, 그 비용이 워낙 커서 평민들은 전사가 될 수 없었다)의 수가 수백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처치구니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BC 3세기경에는 토지소유자가 불과 1백여 명 수준이었다고 전해진다. 사회경제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개혁이 수차례 시도되기는 했지만 기득권층들의 반발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만 결과였다.

공동체 생명의 철칙

1 대 30에 이르는 극소수의 지배, 개혁을 거부하는 배타적 지배계급, 혹독한 교육, 출산을 저하, 강압통치… 스파르타 멸망의 징후들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 날로 짙어지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시민사회운동 탄압, 출산율 저하와 자살률 증대, 살벌한 교육경쟁….

한 국가 내지 공동체 생명의 철칙은 고급을 불문하고 대개 유사하다. 그나마 근대국가가 고대국가와 달리 자체 모순에 의한 사멸을 피할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자기치유기능이 발휘될 때뿐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선 최소한의 공론 기능마저 철저히 압살당하고 있다. 부당하고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KBS 김현석 기자는 느닷없이 지방으로 쫓겨났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리포트를 했다는 이유로 SBS 박수혁 기자는 마이크를 빼앗겼다. “4대강과 민생예산” 편에서 정부 홍보영상에 나왔던 매마른 저수지들이 사실은 4대강 사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지역임을 폭로한 MBC 〈PD수첩〉팀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예정돼 있다.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세계적으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원전 수출은 드라마틱하게 극화돼 ‘MB어천가’로 울려 퍼지고, 삼척동자도 알 만한 관제 기업투해도 시사기획이 뻘뻘스레 미화되고 있다. ‘관영방송’ KBS에 시청료를 올려 주고 거기서 남는 광고료 수천억 원은 조중동 TV채널의 먹잇감으로 바치기 위한 음모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오늘 한국 사회의 형편은 과연 자멸의 문으로 들어섰던 시기의 스파르타보다 나은가? 그나마 스파르타의 지배층들은 검소하고 용감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지배계급은 오직 사이비 민족주의와 헛된 망상을 부추기며 민중을 상대로 사기극 연출에 골몰할 뿐이다. 그러럼 탐욕스럽고, 부패하고, 비겁하고, 무능할진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들은 스파르타보다도 훨씬 급격한 자멸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 ‘국운’이 융성하려면 저항이, 강력한 사회운동이 조직돼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의 진범을 폭로한 코펜하겐 협약

알렉스 캘리니코스 /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 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행사였다. 회담의 성과물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른바 ‘협약’은 회담장에 모인 각 나라 대표단들이 ‘인식’만 했을 뿐이고, 의무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담지도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회담에 걸었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코펜하겐은 지구온난화의 해결을 가로막는 주범이 누구인지 분명히 폭로하는 계기였다. 기후변화가 재앙을 가져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각국 정부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피하려 애썼다. 오히려 그들은 경쟁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그들은 또한 다른 나라의 실패를 핑계로 자신들의 책임도 회피하려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코펜하겐 회담 전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30퍼센트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른 나라 대표들이 호응하지 않자 바로 접었다.

코펜하겐 회담의 분위기를 지배한 것은 나라와 기업 들을 서로 다투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경쟁 논리였다. 이것은 회담을 주도한 두 열강(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가장 뚜렷이 볼 수 있다.

두 나라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중국은 2006년에 21.5퍼센트를 배출했고 미국은 20.2퍼센트였다. 물론 중국이 인구가 훨씬 더 많고 더 가난하다. 미국은 매년 일인당 18.67톤을 배출하며 중국은 4.57톤이다.

조지 부시는 1997년 교토 협정에 중국 등 남반구의 대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핑계 삼아 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반면, 버락 오바마는 전 세계적 협정을 원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중국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오바마가 중국 총리 원자바오와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해괴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었다. 오바마는 심지어 네 정상의 비공개 모임에 불쑥 나타나서 “저랑 얘기 좀 할까요?” 하고 말하고는 미어터지는 탁자에 자리를 잡으려고 정상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무시

이 모임에서 타결된 것이 이른바 ‘코펜하겐 협약’이 됐다. 창피하게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서 선두주자를 자임했던 유럽연합은 무시당했다.

언론인 마크 리나스는 고든 브라운[영국 총리]과 에드 밀러랜드[영국 기후변화부 장관]를 따라 코펜하겐의 실패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했다.

“중국은 자신이 초강국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중국은 코펜하겐에서도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뽐내고 싶어 했다.

“중국 경제에서 석탄에 의존하는 부분의 규모는 10년마다 갑절로 커지고 있고, 중국은 그에 비례해 자기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중국 지도부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 비범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순진하고 과장된 주장이다. 리나스는 미국 대표단이 처음부터 중국을 노렸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오바마가 중국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거라 생각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오바마와 원자바오의 양자회담에서, 원자바오는 배출량 감축이 국제적으로 실증 가능해야 한다는 미국의 핵심 요구에 타협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세계적 기후변화 협정의 운명은 사실상 두 최대 배출국의 손에 달리게 됐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상황에 만족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처럼, 코펜하겐은 “국제 외교 관계가 갈수록 미국과 신흥강국, 특히 중국에 의해 결정될 새로운 세계 질서의 모습을 언뜻 보여 줬다. 사실, 기후 회담에서 벌어진 일들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아직은 불안정하고 복잡하며, 건설적 이면서도 적대적임을 증명했다.”

이 분석은 다소 과장됐다. 유럽 열강들이 코펜하겐에서처럼 계속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담은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규정하는 대립적 협력관계 — 상호의존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 — 를 보여 주기는 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라 부를 만한 것이 못된다. 기후변화 문제를 정밀 해결하려면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 단호하게 도전해야 한다.

번역 김용욱 기자

논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난 듯하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은행들을 구제하고, 막대한 돈을 시장에 퍼붓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하락을 막기 위해 지출을 늘린 덕분이다.

그러나 IMF는 낙관주의에 대해 경고한다. “전진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는 더디고 꽤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업을 줄이기에선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에 활력을 급속하게 회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실상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

각국 정부들이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 경기 부양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더블 덩” 침체, 곧 국가 지원의 버팀목이 사라지면 경제가 다시 붕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1월 초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년 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도 ‘출구 전략’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의 손상은 회복세 유지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IMF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손실이 2조 8천억 달러라고 추정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여전히 국가 지원에 의존할 것이고 신규 대출을 꺼릴 것이다. 반면, 평범한 가정들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고(지난해 말 한국 가계부채 총액은 7백조 원가량이다) 이를 줄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소비 수요가 앞으로도 취약할 것이라는 뜻이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강화되는 공공 지출 삭감 요구들은 근본에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다. 이를 둘러싼 투쟁들이 앞으로 정치를 좌우할 것 같다.

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파산했다. 그러나 지배계급에게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대안적인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틀이 없다. 그래서 지배계급 분파들은 신자유주의를 더 급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공화당 우파가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에 광분하며 누더기로 만든 것이 그 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선진화, 복지 축소,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지방선거를 의식해 공공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선거 뒤로 미뤄질 공산이 있지만, 그 공격 계획은 이미 결정돼 있다).

한편, 경제 위기와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약화 때문에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갈등이 증대해 왔다. 이번 불황이 보호주의 — 1930년대 대공황 때 세계 시장을 붕괴시켰던 — 의 대폭 강화를 낳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보호주의 조처들이 증가했다 — 미 의회가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에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삽입한 것 등.

위기 극복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두 거대 수출 경제, 곧 중국과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 세계경제의 “불균형 개선” 노력의 일환 — 수출 억제와 소비 증대 압력에 반발한다.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다른 나라들에게 떠넘기려는 선진국들의 시도 때문에 파행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전략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다. 그러나 다른 열강들의 협조가 없이는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없다. G20이 G8을 대체한 배경이다.

다른 한편, 미국 제국주의의 장기적 위기는 더 많은 전쟁들을 낳을 수 있다. 최근에 “테러와의 전쟁”의 전선이 예멘으로부터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 반대 운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 정점이 더는 2003~04년처럼 정치 풍경을 지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반전 동원이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다(불가능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경제 위기 부담 전가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파병의 비극이 결합될 경우 새로운 동원력이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을 장기 프로젝트로 유지하려는 전략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 풍경

지금 우리 운동의 핵심 쟁점 — 주류 부르주아 정치에게도 마찬가지다 — 은 경제 위기와 그 대응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임금, 노동조건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노조법 날치기 통과는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지배계급의 공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위기 부담 떠넘기기에 맞서 노동자들의 저항도 늘고 있다.

서구의 노동계급이 1980년대 이래 30년 가까이 침체를 겪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 노동계급은 결정적 패배의 경험이 없다. 위기에 앞선 싸움에서 노동계급의 승패 경험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 힘의 균형추가 현장조합원에서 노조 지도부로 이동했다. 예컨대, 1998년에 김대중 정부와 정리하고 법제화를 합의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 조합원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사퇴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모습은 좀체 보기 어렵다(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철회했을 때 조합원들이 거의 반발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힘의 균형을 보여 주는 사례다).

그렇다고 노조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행사가 지배계급의 조직된 노동계급 공격하기에 맞선 전투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노동자 투쟁의 부활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음을 이해하는 좌파와 노동자 투쟁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김태연 상황실장 인터뷰

“각계각층의 지속적 결합과 투쟁이 정부를 물러서게 해”

용산 참사의 원인을 되짚어 본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는 재개발 정책 때문이었죠. 현재 재개발·뉴타운 지역에서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을 포함해서 기존 주민들 임주율이 15퍼센트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이명박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투쟁에서 밀리고 나서 지난해 초에 ‘좌교우면 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하고 주문했죠. 이런 기조에, 정권을 유지하고 지방하는 검찰·경찰 같은 공안 기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철거민들을 강경 진압한 것이고요.

1년간 끈질기게 투쟁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은 유가족이죠. 보통 투쟁하다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살해됐을 때 유가족들이 버티기 쉽지 않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해 버린다거나. 공안기관은 용산 유가족들에게도 초기에 엄청난 공작을 했어요. 경찰 전담반이 구성돼서 가족들 뒷조사를 하고 약간 틀이 있다고 보이는 곳은 전부 치고 들어왔죠. 그런데 대단하게도 유가족들은 그걸 다 물리쳤어요. 경찰 내부 보고서를 보면 ‘유가족들이 요지부동이다’ 하고 보고돼 있을 정도예요. 경찰들에게 밝히면서도 유가족들은 항상 전면에 서서 싸웠어요.

그리고 종교계부터 문화예술계까지 각계각층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했죠.

용산 남일당 분향소에는 거의 매일 시민 분향이 계속됐고 1년 동안 이어졌어요. 책임자 고발 서명운동에는 20만~30만 명이 참가했어요. 그야말로 거리나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죠. ‘용산 철거민 사망자전 국민법정’에서 [이명박과 김석기 등을 기소한] 기소인도 2만 5천 명이나 됐어요. 1년 동안 모금도 10억 원 이상 됐어요.

용산범대위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대중 동력을 유지하려고 안 해 본 게 없어



1월 9일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희생자 5명을 그린 ‘부활도’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 이운선 기자

요. 1인 시위도 하고, 전국적인 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역 순회 투쟁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1년 동안의 투쟁을 만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용산 투쟁에 지지를 보낸 이



국회인권위원회 김태연 상황실장

유가 월까요?

[용산 참사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민주, 인권, 평화 이런 문제들이 집약돼 있었어요. 개발 자본의 살인적인 철거가 시작이었지만, 정권이 개입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문제 등과 연관이 됐다고 봐요.

1인 시위도 가로막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망루를 쌓은 지 하루 만에 강력 진압을 하고 ‘철거민들은 테러리스트’라면서 몰아붙였는데, 정부는 그때까지 이런 게 먹힌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단과 다르게 용산 문제가 쉽게 [진압] 안 되고 1년이 지나 해가 바뀌려 하자 사실상 정치적 부담이 커진 거겠죠. 전반적인 사회 여론과 분위기 때문에 엄

청난 압박을 받은 거죠.

요약하자면, 지난 1년간의 용산 투쟁에 의해서, 이명박 정권이 이 투쟁이 소강하기만을 기다리기는 어렵고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형성된 거죠. 지자체 선거에 임박해 정치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여전히 남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예요. 재개발 정책도 여전히 문제고 구속자 문제도 있죠. 정부는 6개월 후부터 용산 재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도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재개발이 수도권에서 거의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전 같으면 벌써 용역이 다 쓸어 버렸을 텐데 말이지요. 봄부터 다시 개발이 될 테니 지켜봐야죠. 물론, 이전

처럼 경찰 용역을 앞세워서 막무가내로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일단 눈치를 보겠지요.

미공개 수사기록 3천 쪽이 공개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현재 항소심에서 구속자 변호인단이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한 상태고, 만약에 검찰이 공개를 안 하면 검찰 압수수색 요구를 재판부에 할 거예요. 그럼 진상규명에도 진전이 있겠죠.

용산 투쟁하면서 끝에 가서 질 수는 있을지언정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한 번 붙으면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정리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용산참사 1주기 추모제
1월 20일(수) 저녁 7시 용산참사 현장

용산참사 향의 운동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고 전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화마에 불타고 칼에 찢겨진 ... 시신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던”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3백 55일 만인 1월 9일 범국민적 애도 속에 장례를 치렀다. 처참하게 희생된 철거민들은 고이 묻혔지만, 이명박의 살인죄는 결코 묻히지 않았다.

용산참사는 이명박의 ‘부자천국 서민지옥’ 정책과 공안 통치가 낳은 예고된 살인이었다. 용산 철거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비정한 본보기에 무참히 희생된 것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인간 사냥’했던 김석기는 철거민 40여 명을 진압하는 데 경찰을 무려 20개 중대 1천6백 명을 동원했고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최소한의 대화와 협상도 없이 살인적인 진압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기고, 향의 운동을 시종

일관 탄압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3천 쪽을 감추며 진실을 은폐·조작해 철거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경찰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경찰은 추모제와 3보 1배, 1인 시위, 단식농성까지 가로막고 탄압했다. 범법은 검찰의 논리(‘철거민의 화염병이 용산참사의 원인이고 경찰의 진압은 정당하다’)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주며, 철거민들에게 실행 6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향의 운동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용산참사가 벌어지자마자, 1백여 개 단체가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를 구성했다. 좌파들이 주도한 용산범대위는 참사 직후부터 노동자, 학생, 청년들이 참가한 대규모 거리 시위를 조직했다. 이런 행동이 초반에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를 사퇴시켰다.

그 후 향의 운동의 동력이 줄자, 곧바로

이명박은 반격에 나섰다. 용산참사 향의 운동에는 모조리 ‘불법’ 딱지를 붙여 경찰력으로 가로막았다. “집회를 하려고 하면 경찰이 막아서고, 펼침막 하나 거는 것까지 경찰이 와서 뜯어 갔[고] ... 대화도 거부하고, 집회도 불허”(문정현 신부)했다. 유가족들을 폭행하고, 영장마저 군화발로 짓밟는 짐승 같은 만행을 일삼았다.

끈질기게

이러한 탄압에도 유가족과 용산범대위, 각계각층의 저항이 계속됐다. 문정현 신부에서 시작된 용산참사 현장의 생명평화미사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으로 확대돼 2백80일 넘도록 이어졌다. 기독교 대척위와 불교, 원불교 성직자들도 합류했다. 각계각층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정부가 나서서 용산참사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예술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보탰다. 시민들의 성금과 물품 기증도 줄을 이었다. 야당 의원들도 나서서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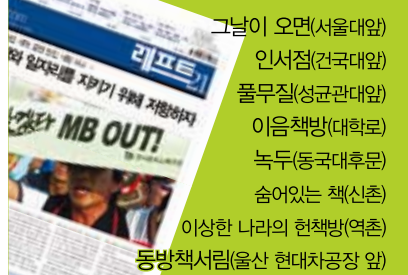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도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했고, UN 사회권 위원회도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지적했다.

1년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는 끈질긴 저항과 광범한 연대에 떠밀려 결국 해를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한 발 물러서 총리 사과와 유가족 생계 보장 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정부는 약속한 대로 재개발 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죄 없는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용산참사 향의 운동이 거둔 성과는 이명박 시대에도 싸우고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김민숙 다함께 연대협력국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로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대전 |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뒤 버스정류장 앞